

2021년 봄호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연구논문】

- 교육감 선거의 특징 분석
: 후보자는 이념을 유권자는 정당을 김영진·가상준 / 1
- 완벽주의 성향이 대학생의 감정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
김동건·김한슬·김규택·박은정·채민호·허창구 / 31
-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유라·이은주 / 65
-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을 중심으로 -
임상욱·전지혜 / 93
- Validation of a Floor Noise Annoyance Scale (FNAS)
in a Community Sample Na Young Shin / 133

【연구경향】

-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
: 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점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김진웅 / 157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차 례

【연구논문】

- 교육감 선거의 특징 분석: 후보자는 이념을 유권자는 정당을
..... 김영진·가상준 / 1
- 완벽주의 성향이 대학생의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
..... 김동건·김한슬·김규태·박은정·채민호·허창구 / 31
-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유라·이은주 / 65
-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임상욱·전지혜 / 93
- Validation of a Floor Noise Annoyance Scale (FNAS) in a
Community Sample Na Young Shin / 133

【연구경향】

-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 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점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김진웅 / 157
- 『연구방법논총』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181
- 『연구방법논총』저술 윤리강령 188
- 『연구방법논총』편집 및 심사 규정 190
- 『연구방법논총』편집위원명단 194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3.6.1.1>

【연구논문】

교육감 선거의 특징 분석: 후보자는 이념을 유권자는 정당을

김영진*·가상준**

논문요약

본 연구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이념,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당에 대한 선호도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책 가치관의 공유보다는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을 배제시켰지만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와 연계된 정당을 중심으로 참여와 선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교육감 선거를 후보자와 정책이 중심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환경에 휩쓸리는 선거로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교육감 선거이지만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후보자들과 연계된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정당 간 이념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강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볼 때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선거 환경에 의해 교육감이 결정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미약한 정보,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 후보자들이 펼치고 있는 선거 전략을 볼 때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와 선택은 지금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신저자

직선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육감 선거, 정치적 중립, 정책선거, 이념, 정당 간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 정당 호감도

I. 서론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는 선거 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지방선거가 한국정치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과연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아니면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지역적 행사인지를 놓고 많은 논의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강신구 2014; 강원택 1999; 이남영 2011; 송건섭·이근수 2011; 장승진 2019; 황아란 2013).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점점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는 선거로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기보다 지역적 중요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대통령 평가와 큰 관련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 광역단체장과 같은 선거구,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 교육감 선거는 진보 후보들과 보수 후보들 간의 뜨거운 경쟁 그리고 2014년 당선된 진보 교육감의 재선 여부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2007년 2월 부산에서 교육감 직접선거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울산, 충북, 경남, 제주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고, 2018년 교육감 선거는 전국 단위로 동시에 치러진 세 번째

교육감 선거였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과 정책 공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적 행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여 정당 공천을 불허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낮춰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며, 교육전문성 검증이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전 2010; 박진우 2011; 윤상호·허원재 2014).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없는 만큼 정당 공천 혹은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및 단체장 임명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박진우 2011; 육동일 2012; 윤상호·허원재 2014; 윤성현 2012; 이기우 2011; 최영출 외 2012). 그러나 이러한 주장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 배제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으면서 후보자 중심의 교육감 선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선거라는 정치적 행사에 정당을 배제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념은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들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도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자들은 이념을 통해 스스로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다른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양은택·김왕준 2018; 서현진 2019; 함승환 2019). 교육감 후보자 간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지향했던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선거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와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등장한 선명한 진보 교육정책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있어 이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2018년 교육감 선거도 2014년에 이어 후보자 간 이념 대립의 장이 되었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자의 뚜렷한 이념적 대립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극명한 차이를 불러왔으며, 이는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한편, 후보자들은 이념에 초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념과 연계하여 특정 정당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에게는 이념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정당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당 간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 그리고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전략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그러나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간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경쟁이 선거에 핵심일 수밖에 없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념성을 강조하지만 선거과정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며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후보자의 이념성정보보다는 후보의 능력,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라 말하고 있다.³⁾

본 연구는 정당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과 참여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놓는 교육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지, 후보자들이 강조하는 그들의 이념의 일치 정도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후보자가 드러낸 정치성향과 정당을 연계함으로써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당 간 양극화 속에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및 선택에 있어 정당이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Abramowitz and Saunders 2008; Bartels 2000; Dodson 2010). 무엇보다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와 당파적 유권자 간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및 선택은 정당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가상준 2020; 이재묵 2014). 과연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그리고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 보려 한다.

교육감 선출에 대한 직접선거의 역사는 짧고,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 또한 제한적이다. 정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는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투표 결정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2)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는 두 정당 의원들 간 이념의 차이는 커지며 동일한 정당 의원들 간 이념의 분포는 작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은 높지만 다른 정당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3) 설문조사는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외부자 평가”를 위해 실시되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감 선거가 입법 취지에 맞게 선거가 전개되고 있는지 또한 후보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통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띠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 기존연구 검토

교육감 선거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한 논의이고 두 번째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태에 관한 분석이다. 전자가 교육감 선출에 있어 직선제와 정당 배제 관련 논의라면, 후자는 다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두 연구 모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이 교육감 선거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다(강우진·배진석 2018; 고전 2019; 서현진 2014; 2019; 안철현 2013). 이는 교육감의 업무와 권한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에 관심을 갖는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 논의는 직선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정당 공천 배제의 핵심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표시열(2011)은 교사 개인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지위와 신뢰를 남용해

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교육이 특정 정치적 색채를 강요하거나 당파적이어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정의내렸다. 음선필(2012)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더 포괄적으로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장된 정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기우(2011)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정당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도 대통령의 정부 구성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진우(2011)는 교육감이 행사하는 권한(조례 작성, 교육규칙 제정, 예산 편성,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등)은 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견지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잣대로 교육감 후보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된 시각이라고 보았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선거에 관심도를 높여주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돕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대결적 양상이 지배적이고, 각 교육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안철현 2013). 교육감 선거 직선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 방식을 현재의 직선제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권혁운 2011).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논쟁은 결국 다양한 교육감 직선제 대안 논의로 확대되었는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 ‘러닝메이트 또는 공공등록제’, ‘정당공천 또는 정당표방제’, ‘임명동의제’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⁴⁾

4) 각각의 대안에 대한 최영출(2010)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의 교육 전문성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담보하고, 주민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 행정 효율성은 일정 부분 보장한다고 보았다. 정당공천제와 정당표방제는 높은 주민 대표성을 제공하고, 일반행정과의 연계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하지만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행정 효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편,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은 교육감 선거의 특징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 및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후보자들의 유권자 접근 방식을 정책보다는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양은택·김왕준 2018; 서현진 2019; 함승환 2019).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당 공천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그들의 이념성, 정치 노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표방이 불가능 상황에서 이념을 통해 정당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중립적 가치에 기초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택과 깊게 연결되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강우진·배진석 2018; 함승환 2019).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당선자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2014년 선거부터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념성향이 강한 후보자들의 당선이며 특히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2014년에 다수 당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비교하여 교육감 선거의 당선자들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경선을 통한 공천제도가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념적으로 극단적 성향을 띠는 후보자들만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상호·허원재 2014).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⁵⁾ 이들의 강한 이념 성향으로 인해 후보자 간 이념 양극화는 매우 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이념적으로 중위 투표자 정치이념이 당선자의 정치이념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러한

러닝메이트제는 높은 수준의 주민대표성과 일반행정을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교육 전문성,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에 등록된 교육감 후보는 59명으로 3.47:1의 경쟁률로 제6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18:1의 경쟁률(17개 광역단체장 71명 후보자)과 4.63:1(16개 광역단체장 74명 후보)에 비해 후보자 수가 급감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55명(제5회), 57명(제6회), 71명(제7회)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조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윤상호·허원재 2014).

교육감 선거에 대한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이다(서현진 2014; 장승진 2014; 조진만·윤상진 2012). 교육감 선거 이외의 다른 선거들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결과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서현진(2014)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포함되는 정치선거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치선거에 종속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진 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특징을 통해 보았을 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연령대 그리고 남성이 큰 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이면서, 30-4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해 살펴보았을 때, 시·도지사 선택에 있어서는 출신지, 국정운영평가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학부모 세대 변수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두 선거가 종속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조진만·윤상진(2012) 또한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야기되는 논란이 유효한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선거가 같이 실시되는 것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 쟁점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은 두 선거를 분리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으며 교육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장승진(2014)은 2014년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분할투표 즉, 두 선거를 분리하여 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행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 지지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념 선명성을 통해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에 종속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 후보자의 이념과 광역단체장 후보의 소속 정당을 점차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힘들게 되었다(함승환 2019). 특히 교육정책은 강한 이념성을 띠 수밖에 없기에 교육과 정치, 교육감 선거와 중앙정치의 분리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감 선거 후보자 간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당과의 연계성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간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Béjar et al. 2018; Dalton 2008; Dodson 2010; Hetherington 2008)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보여주는 연계된 전력을 통해 교육감 선거 참여 그리고 투표선택을 결정하게 되고 있다.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에게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나타나듯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 간 이념적 양극화 또한 유권자들에게 정서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당 후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들보다 정당과의 연계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에게 점점 커지는 정당의 영향력으로 인해 후보자는 이념을 말하지만 유권자는 정당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그리고 교육감 선거 참여 또한 정서적 양극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교육감 선출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1.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화

교육감 선출은 대통령 임명 방식에서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주민들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모해 왔다. 이는 1952년 지방자치

위한 선거가 실시된 이후 정치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 대통령 임명

초기 교육감 선출방식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써 약 4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 시·읍·면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지사체장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시행되었다. 이어서 5·16 군사정변 이후 교육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잠시 변경되었으나, 정국이 수습된 이후 교육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교육위원회 추천→문교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방식이 1990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1991년 3월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가 재개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 또한 확대·적용됨에 따라 대통령 임명 방식의 교육감 선출은 폐지되었다.

2) 교육위원회에 의한 선출

간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1년 3월 8일 제정(동년 6월 20일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치법)」에 있다. 제1조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고 7인 이상의 위원 정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위원회에 의한 선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운영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각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를 담당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구성원인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

을 부여받고, 시·도의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이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한편 선거에서 교육위원 후보에 대한 기호번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교호순번제(순환배열 방식)가 적용되었다.

3)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선출과정에서의 영향은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존재해 왔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교육위원 선거가 폐지가 되고, 주민에 의한 보다 직접적인 교육감 선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1997년 12월 17일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출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들과 교원단체가 추천한 선거인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또한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마다 1인으로 하되,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 인사가 할 수 있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학부모대표 40~50%, 교원 대표 30~40%, 지역위원 10~30%의 비율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교육감과 의결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주민으로부터 이원적 정통성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며,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교육자치법에서 교원단체 추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기능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선출이 여전히 간선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학부모대표와 같이 교육 문제와 직결된 일반 주민의 위임을 받은 인물을 통해 선출한다는 사실은 이전의 제도보다 직접적인 방향으로 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4) 주민직선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방식은 2006년 12월 20일 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변화했다. 교육감 선출 제도 변화에 따른 실제 적용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각 시·도별로

시행됐다. 이후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현재 까지 제3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다.

2. 교육감 선거 관련 논의

교육감 선출 관련 중요한 논의는 후보자의 자격과 후보자 정당 공천제에 관한 것이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경력요건과 공무담임권 및 기본권 침해 대립이 지속되는 동안 그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1년 당시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으로서 경력요건은 20년으로 현재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1995년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1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1997년 개정안은 5년, 2014년 개정안은 3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피선거권 기준 중 연령, 관할구역 주민등록 여부, 입후보제한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사직 규정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 지방선거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감의 경력기준이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력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3년이라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2010년 전국단위의 직선제 선거가 실시된 이후 세 번의 선거만이 시행되어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임명제와 간선제, 직선제로의 제도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만 하는가’,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 간의 경쟁은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공고화되기까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공고화와 변화 전까지 현행 교육감 선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지 의문이 남게 된다. 특히 정당 공천 배제라는 규정은 유권자의 투표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 중 하나가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선거와 대별되는 특징으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투표행위에 동원되

었던 요인 중 보다 지배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투표에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IV.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분석

교육감 후보는 3년의 교육 경력을 필요로 하며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정책 공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감 선출에 있어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전문성은 경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정당의 배제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국 17개 시·도 총 59명의 후보에 대한 이념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당의 공천이 배제된 선거이기에 각 후보들이 선거 공보지나 벽보에 ‘보수 후보’, ‘중도’, ‘진보 단일 후보’ 등 후보 자신이 표방하는 교육 정책적 이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2018년 설문조사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와 보수 교육감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를 구분하였다. 전체 1,000명의 응답자 중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133명, 진보 교육감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324명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1. 가설 설정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 즉 유권자가 어떤 요인을 바탕으로 진보성향 후보자와 보수성향 후보자에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당공천의 배제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후보자의 이념이다. 다양한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느끼거나, 후보들 간의 이념적 성향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념적 근접성을 갖는 후보자에게 유권자가 선호를 느끼고 투표에 반영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증명해 왔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들은 전략적으로 정치성향을 밝히고 있으며 언론은 이들을 이념의 잣대를

통해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유사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의 절차가 실제 정당들이 포함되는 정치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선호가 이념적 동질감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념(유권자 주관적 이념평가 점수)을 분석 요인에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였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이념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향점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념과 정책이 깊은 관련성이 있기에 이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권자의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 있어 이념성보다 정책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투표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는지 알아보았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외국어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수월성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정책의 핵심 이슈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의 평준화를 주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고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 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와 관련된 논란이 불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 폐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유권자의 교육감 후보자 선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⁶⁾ 이를 통해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에 찬성할수록 진보 교육감을 선택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감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 변수를 포함했다. 교육감 후보들은 경력, 이념을 통해 자신들의 성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다른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요인들과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두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교육감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⁷⁾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진보 교육감

6)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매우 반대한다, (2)반대한다, (3)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에 대한 선택이다.

7)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0-10)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0-10)를 뺀 변수

후보를 선택하였을 것이며,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보수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양(+)의 값을 보일수록 진보 교육감 후보를 음(-)의 값을 보일수록 보수 교육감을 선택하였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한국에서 교육은 개인적 입신양명의 사다리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대학입학의 관문까지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가치관과 궤를 같이한다는 통념에 따라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후보자에 투표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령이 높아지면 진보성향의 후보자보다는 보수성향의 후보자를 선택했을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의 연령 효과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직선제가 전면 확대되고 3번의 선거만이 실시되었음에 따라 분석에 요구되는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고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연령효과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교육감 선거 양상 및 결과를 보았을 때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유권자의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행태적 차이를 알아보았다.⁸⁾ 다음으로 소득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권자는 보수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로 +10부터 -10까지 분포되어 있다. 10에 가까울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갖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0에 가까울수록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높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설문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호남(광주·전북·전남)',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강원'으로 분류하였다.

2. 통계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진보 후보 혹은 보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이다.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실시된 지방선거 유권자인식 설문조사를 활용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호감도가 높은 양의 값을 가질수록 진보성향의 후보에 투표하였으며 호감도가 높은 음의 값을 가질수록 보수성향의 후보에 투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감 선거가 의도와는 다르게 정당이 포함되는 정치선거에서의 양상과 같은 것이다. 반면, 유권자의 이념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유권자들은 이념에 따른 투표를 하였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념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당 선호도 변수의 영향력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정당변수를 제외할 때 나타나는 통계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의 이념변수 영향력은 강력한 정당 변수에 의해 사라진 것이라 하겠다.

한편,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었던 외국어고·자사고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2014년에 이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교육감 선거에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이슈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통계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은 교육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책중심의 선거라기보다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선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결과라 하겠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과 이념은 정당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선거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자 중심의 정책이었지만 현실에서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 평가와 연령, 소득수준의 영향력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교육수준 변수와 지역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진보성향의 후보자에 투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구·경북(TK)지역에 비교하여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강원/호남 유권자들은 진보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영남권에서의 TK와 PK 유권자들 간의 구별되는 결과라 하겠다.

〈표 1〉 교육감 선거 투표 행태 분석 결과

	계수	표준오차
유권자 이념	0.050	0.081
외고·자사고 폐지 입장	0.044	0.165
정당 간 호감도 차이	0.155***	0.045
대통령 평가	0.233	0.233
소득	0.089	0.079
교육수준	0.287*	0.158
연령	0.015	0.012
성별	0.291	0.253
수도권 ¹⁰⁾	1.380***	0.421
PK	1.565***	0.515
충청	0.689	0.529
호남/강원	4.278***	1.099
상수	-4.150	1.418
N	451	
적중률	77.2%	

*p<0.1, **p<0.05, ***p<0.01

9) 호남을 강원지역과 합친 것은 설문조사 호남 응답자 중 중 보수 후보자에 투표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호남을 따로 가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면 계수와 표준오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한 차선택으로 강원과 합치게 되었다.

10)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투표행태를 보여준 TK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의 통계분석 결과는 2018년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맥락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이 유권자들에 잘 전달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경력을 통해 정당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의 전략이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당이라는 지름길(short cut)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당 변수는 유의미하지만 이념 변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은 정당으로 전환시켜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선거(지방선거)에서 압승이 교육감 선거에도 전달되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V. 2018년 교육감 선거 참여 유권자의 특징

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는 교육감 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특정 유권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낮은 편으로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광역단체장 선거 참여와 비교할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했지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 참여자 중 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투표 여부 교차분석

		교육감 선거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계
광역단체장 선거	투표했다	555	69	624
	투표하지 않았다	0	376	376
	계	555	445	1000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 참여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교육감 선거 참여는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변수, 교육정책(외교·자사고 폐지)에 대한 의견 강도(強度)를 포함시켰다.¹¹⁾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혹은 강한 찬성의 의견을 가질수록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한편, 교육감 선거만 따로 실시될 경우 여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효능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았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후보자 선택에 있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지식 변수를 포함시켰다.¹²⁾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 또한 정당 공천 없는 후보자들 간 대결이지만 정당 간 대결로 인식되는 만큼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정당 간 호감도 차이(절대값) 변수를 사회·경제적 변수(연령, 성별, 교육, 소득)와 함께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표 3〉은 이에 대한 통계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감 선거에

11) 이를 위해 매우 찬성한다, 매우 반대한다의 의견을 1로,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의견을 0으로 코딩하였다.

12) 교육감 선거 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치 지식으로 대체하였다.

대한 관심이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 참여는 연령과 소득에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 참여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의 중요성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배제되어 있지만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선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교육정책(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의견) 변수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고·자사고 폐지 이슈는 유권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정치지식 또한 교육감 선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 하기에 관련성을 예상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3〉 교육감 선거 참여 여부

	계수	표준오차
교육	0.054	0.091
소득	0.106**	0.046
성별	0.068	0.150
연령	0.017***	0.006
교육감 선거 관심도	0.322***	0.096
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의견	0.300	0.199
정치 지식	0.118	0.076
정치 관심	0.914***	0.123
정당 간 호감도 차이	0.113***	0.029
효능감	0.056	0.041
상수	5.469	0.795
N	979	
적중률	70.7%	

*p<0.1, **p<0.05, ***p<0.01

교육감 선거 참여는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관심 그리고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교육정책과 이념보다는 정당과의 연계성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 참여 자체도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정당을 배제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정당을 연계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두 선거 참여 여부

	계수	표준오차
교육	0.152	0.170
소득	0.162*	0.087
성별	-0.076	0.285
연령	0.001	0.012
교육감 선거 관심도	-0.069	0.175
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의견	0.178	0.369
정치 지식	0.224	0.138
정치 관심	-0.074	0.226
정당 간 호감도 차이	0.102*	0.053
효능감	-0.059	0.071
상수	0.607	1.441
N	612	
적중률	88.9%	

* $p < 0.1$, ** $p < 0.05$, *** $p < 0.01$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하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 간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앞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하였지

만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 참여자 중 11.1%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서현진 2014; 조진만·윤상진 2012). 한편, 다른 연구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연계하며 투표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우진·배진석 2018; 함승환 2019). 두 유권자를 나누는 기준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당과의 관련성 때문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감 선거 참여 여부 모형의 독립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종속변수(두 선거에 모두 참여한 경우 1,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참여한 경우 0)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4>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강할수록 교육감 선거에 더욱 참여할 것이라 예상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다만, 소득과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의 영향력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먼저 두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관심 등에서 보듯이 매우 유사한 유권자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두 유권자 간 미세한 차이를 불러오는 것은 두 정당 간 호감도 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클수록 광역단체장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큰 유권자일수록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정당의 호감도로 대표되는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력이 교육감 선거 참여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육감 선거를 다른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보기 어려우며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정당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배제시킴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연구들이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독립적으로 인식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서현진 2014; 조진만·윤상진 2012) 2018년 선거에서는 전혀 그러한 점이 발견되

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도 교육정책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진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보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은 교육감 선거가 껌껌히 선거이기 때문이다. 즉, 우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협소하고, 교육감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별도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선거 전까지 화두가 되었음에도 선거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 것은 일반 유권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이 소모적 경쟁 또는 정쟁의 주제로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다각적인 정책 논의가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 벽보 및 공보지 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구는 이념적 성향(보수, 진보, 중도) 일색으로 명확히 차별화된 정책이나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선거 과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후보자의 능력(31.8%), 정책과 공약(25.6%), 도덕성(25.2%), 후보자의 이념(17.5%)의 순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후보자들의 능력, 정책, 도덕성을 알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이념을 통한 정당과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중심의 투표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정당 간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특히 당파적 유권자들에게 발견되는 현상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갖고 있지만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당파적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어느 때보다 높고 투표선택도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자의 이념과 연계하여 정당 후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듯이 연계된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

고 있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로 인해 선거과정 속에서 부각된 정책이나 공약이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정서적 양극화도 깊어진다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연계된 정당의 중요성은 더욱더 짊어질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이념,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당에 대한 선호도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책 가치관의 공유보다는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호의적인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의 후보자를,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호의적인 유권자는 보수성향의 후보자를 선택하였다. 한편,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을 배제시켰지만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와 연계된 정당을 중심으로 참여와 선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감 선거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교육감 선거를 후보자와 정책이 중심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환경에 휩쓸리는 선거로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교육감 선거이지만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후보자들과 연계된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정당 간 이념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강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두 선거를 구분하고 있지만 현행 동시 선거의 구조와 정당의 영향력 속에서 두 개의 선거는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 배제, 정치 세력과의 연대 금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치선거가 구성해 놓은 흐름 속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볼 때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선거환경에 의해 교육감이 결정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정당이 유리한 환경이라면 진보 교육감 후보자가 보수성향의 정당이 우세한 환경이라면 보수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치선거와 교육감 선거 모두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선거결과만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교육감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간접적인 변수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미약한 정보,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 후보자들이 펼치고 있는 선거 전략을 볼 때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와 선택은 지금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직선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20. “정당 간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9권 2호: 101-129.
- 강신구. 2014. “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OUGHTOPIA』 29권 1호: 65-95.
- 강우진·배진석. 2018. “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4권 4호: 89-121.
-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지방적 행사 혹은 중앙정치의 대리전?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고 전. 2019. “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31권 1호: 1-25.
- 고 전. 2010. “교육감 선거제도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진단 연구.” 『교육법학연구』 22권 2호: 1-21.
- 권혁운. 2011.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교육정치학연구』 18권 2호: 33-56.
- 박진우. 2011.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권 1호: 175-197.
- 서현진. 2019.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35권 2호: 75-111.
- 서현진. 2014. “동시 선거로 실시된 2014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7권 2호: 35-65.
- 송건섭·이근수. 2011.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5권 3호: 49-71.
- 안철현. 2013. “교육감 선출제도 논쟁 분석과 대안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권 3호: 233-253.

- 양은택·김왕준. 2018. “2014년과 2018년 교육감선거 입후보자 특성 비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권 3호: 267-296.
- 육동일. 201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4권 2호: 129-159.
- 윤상호·허원재. 2014.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 윤성현. 2012.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학적 재검토.” 『세계헌법연구』 18권 1호: 91-123.
- 음선필. 2012.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변론-.” 『홍익법학』 31권 1호: 101-144.
- 이기우. 2011.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지방행정연구』 25권 3호: 35-58.
- 이남영. 2011. “중앙정치 갈등의 표출로서의 지방선거: 지역, 이념, 정당갈등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권 4호: 219-240.
- 이재묵. 2014. “엘리트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 투표 참여 및 정치 관심도: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0권 1호: 145-168.
- 장승진. 2019. “한국 지방선거의 다층적 회고적 투표: 2018년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권 1호: 10-26.
- 조진만·윤상진. 2012.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동시 실시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기도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20권 2호: 202-230.
- 최영출. 2010. “[주제발표 III]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지방선거제도개선 제2차 토론회, 75-111.
- 최영출·김민희·박수정·오세희. 2012. “일반시민 인식분석을 통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탐색.” 『도시행정학보』 25권 3호: 243-271.
- 표시열. 2010.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권 1호: 145-167.

- 함승환. 2019. “정당 없는 정당효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 재검토.”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325-342.
- 황아란. 2013.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현직효과와 중앙정치의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7권 5호: 277-295.
-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2008. “Is Polarization a Myth?” *Journal of Politic* 70(2): 542-555.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35-50.
- Béjar, Sergio, Juan A. Moraes, and Santiago López-Cariboni. 2018. “Elite polarization and voting turnout in Latin America, 1993-2010.”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30(1): 1-21.
- Dalton, Russell J. 2008.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Party Systems: Party System Polarization, Its Measurement, and Its Consequ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7): 899-920.
- Dodson, Kyle. 2010. “The Return of the American Voter? Party Polarization and Voting Behavior, 1988 to 2004.” *Sociological Perspectives* 53(3): 443-449.
- Hetherington, J. Marc. 2008. “Turned Off or Turned On? How Polarization Affects Political Engagement.” In *Red and Blue Nation? Consequences and Correction of America's Polarized Politics*, edited by Pietro S. Nivola and David W. Brady. 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titutio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Youngjin Kim*·Sangjoon Ka**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factors having an effect on voters' decision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Likewise, the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participating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voters' ideology, perceptions of education policies, favorability for political parties, and evaluations of the president. Results showed that voters' choice of candidates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influenced not by their ideological homogeneity or sharing policy values but by their favorable feelings toward the two major parties. On the other hand, voters' participation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was related with interest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however, favorable sentiment toward political parties was more important. It implied that political parties were excluded for political neutrality, but the voters' choice and participation were decided with the political party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ow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electorate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made the election a political factor and environment driven rather than candidate and policy oriented.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cy elections are key to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but voters' participation and choice are determined by parties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s. Meanwhile, it is expected that this trend gradually become stronger as partisan polarizat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are intensified.

Given the weak information on candidates, relatively low interest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and the candidates' electoral strategy, participation and choice of the electorate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arty as it is no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allow the party nomination or the running mate system with a governor.

Keywords : election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political neutrality, policy election, ideology, partisan polarization, affective polarization, party favorability

투고일: 2021.02.11. 심사일: 2021.02.26. 게재확정일: 2021.03.12.

* Ph.D. Candidate, Dankook University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3.6.1.31>

【연구논문】

완벽주의 성향이 대학생의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

김동건·김한슬·김규태·박은정·채민호*·허창구**

논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계발 유형과 기질적 및 인지적 선행요인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이 자기계발 유형(항상적, 예방적, 강박적)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강점인식 수준을 높이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 수준을 낮추었고, 자가지향 완벽주의에 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모든 자기계발 유형의 수준을 높였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박적 자기계발 수준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점인식은 항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 수준을 높였지만, 강박적 자기계발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강점인식은 다차원 완벽주의가 항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항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은 강점인식에 기반한 적응적 자기계발로 볼 수 있으며, 강박적 자기계발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발생시킨 불안에 기초한 부적응적 자기계발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연구모형에 정서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계발 유형에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인지적 개입 뿐 아니라 정서적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적응적 자기계발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다차원 완벽주의, 강점인식, 자기계발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험했다. 불안해진 고용시장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를 겪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은 점차 희미해졌고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도 막을 내렸다.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위 이외에도 소위 ‘스펙’이라는 추가적인 취업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펙경쟁은 더 이상 대학생들에게 있어 특별한 일이 아니며 현재도 많은 대학생들이 고스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펙추구 현상의 등장에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련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강미영 2012; 반준석 2014; 신광영 외 2012; 장성연 2013). 하지만, 대학생의 스펙추구는 취업난에 대한 주관적 대응이며 스펙을 선정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관여되기 때문에 스펙추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허창구 2020).

구직자들은 취업난 속에서 취업성공을 위해 스펙을 준비한다고 하겠지만, 취업 성공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자격증과 같은 스펙이 취업성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안국 외 2004; 채창균 외 2005),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자격증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황여정 외 2008).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스펙이 채용 후 성과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함으로써(커리어 19/07/30), 최근 많은 조직에서 탈스펙화의 일환으로 블라인드 채용방식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잡코리아(2020/4/8)가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구직자의 78%는 여전히 스펙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스펙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손해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성인과 김은애(2014)의 연구에서도 고스펙을 추구하는 이유가 ‘남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스펙을 위한 노력이 외현적으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동기가 타인과의 과도한 경쟁이나 막연한 취업불안에 의한 것이라면 내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창구(2020)는 스펙추구 행동을 구직자의 심리적 상태에 의한 행동으로 정의하기 위해 ‘자기계발’로 개념화하고, 자기계발 노력의 의도나 원인에 따라 향상적 자기계발, 예방적 자기계발, 강박적 자기계발로 유형화하였다. 향상적 자기계발은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성취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얻고자 하는 자기계발 동기이며, 예방적 자기계발은 당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전략을 통해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기계발 동기이다. 한편, 강박적 자기계발은 직접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자기계발을 의미한다.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삶의 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향상적 자기계발이었으며, 강박적 자기계발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방적 자기계발은 진로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가정했으나 그러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향상초점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자기계발을 유형화한 허창구(2020)의 연구를 확장하여 향상적, 예방적, 강박적 자기계발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자기계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기질적 및 인지적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기질적 요인으로 다차원 완벽주의를, 인지적 요인으로는 강점인식을 선정하였다.

Burns(1980)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격특성은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며 타인과 비교할 때 탁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다. 완벽주의에 대한 초기 연구는 완벽주의를 정신병리의 일종으로 보고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Pacht 1984). 이후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다양한 하위 차원 즉,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중요한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중요한 타인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자기계발과 관련된 완벽주의 연구는 주로

예체능 분야 학생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자가지향적 완벽주의가 훈련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신체관리 등 자기관리의 모든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관리의 모든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고은 외 2012; 정태선 2017; 황진철 외 2013). 본 연구는 완벽주의가 행동의 기준으로 기능하며(Burns 1980),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자기계발에 열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송동림 2009),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특성이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전시키는 자기계발 수준의 차별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강점인식은 개인이 스스로의 강점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Govindji et al. 2007),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갖게 하고 개인적 목표를 추구(Linley et al. 2010)하게끔 만든다.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관련성이나 강점인식과 자기계발의 관련성을 직접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이수연(1999)의 연구에서는 장점수용이 높은 집단이 높은 자가지향 완벽주의를 보여주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과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Hewitt et al. 1991), 자기계발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강점인식과 활용이 진로목표와 관련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Lopez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 적응성 및 진로 정체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었다(김민정 외 2014; 이지원 외 2017; 조남근 외 2016). 따라서 강점인식은 개인의 완벽주의 경향성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자기계발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질적 요인(다차원적 완벽주의)과 인지적 요인(강점인식)이 자기계발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질-인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경향성이 이들의 강점인식 및 다양한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건전한(향상적, 예방적) 자기계발과 부정적(강박적) 자기계발(허창구 2020)의 선행변인과 매개변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차원 완벽주의

완벽주의란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고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이며 이러한 완벽추구는 개인의 외모, 도덕성, 행복, 수행 등 모든 영역에 일반화될 수 있다(Rhéaume et al. 1995). Hewitt과 Flett(1991)는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하위요인을 제안한 이후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면서도 낮은 우울과 높은 긍정 정서를 보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적응적 측면을 보여주는데 반해,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비추어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낮은 통제감과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측면을 보여주었다(김현정 외 2006; 이미화 외 2002; 하정희 외 2011; Chang et al. 2000; Dunkley et al. 2000; Flett et al. 1991; Hewitt et al. 1991; Rice et al. 1998).

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사회의 높은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현상은 사회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으며(이미화 외 2002; 하정희 외 2006),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완벽주의의 변화에 대한 메타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수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et al. 2019).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자기계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완벽주의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계발 유형에도 상이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로영역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Park et al. 2011; 성민경 20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진로미결정과 같은 진로 변인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현주 2011; Muliasari et al. 2019; Park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계발 주제에 맞게 완벽주의 유형 중 타인의 완벽을 기대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제외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의 유형(향상, 예방, 강박)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점인식

포괄적 관점에서 강점을 설명한 Linley(2008)에 따르면 강점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 특징이며 그것을 활용하는 이에게 진정성과 열정을 느끼게 하고 최적의 기능과 발달 및 수행을 이끌어준다. 강점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강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으며(김민정 외 2014), Lopez(2008)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갖게 하고 개인적 목표를 추구(Linley et al. 2010)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발휘(Gardner 1997)하게 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강점인식의 긍정적 효과는 꾸준히 밝혀져 왔다. 구체적으로 강점인식 수준은 안녕감이나 활력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Govindji et al. 2007) 심리적 안녕감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조남근 외 2016). 또한 강점인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정신건강 차이를 분석한 실험연구(김지영 외 2013)에서는 강점인식 집단의 삶의 만족, 긍정정서, 자존감 등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강점 인식과 활용이 자기 실현을 가져온다는 성장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Lopez et al. 2018), 강점인식은 진로와 관련된 진로성숙도(김민정 외 2014), 진로결정효능감(김수림 2014), 진로 정체감(이지원 외 2017)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점인식은 완벽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강점을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희영 외 2017; 이수연, 1999). 한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거나 판단의 근거를 사회적 기준에서 찾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강점인식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이애리 외 2019; Hewitt and Flett

1991; Hewitt at al. 1999).

3.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

스펙은 대학생이 취업과 같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이러한 과정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비교나 부모의 권유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Higgins(1997; 1998)의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상적 자기지향(ideal self-guide)과 의무적 자기지향(ought self-guide) 중 하나의 동기적 지향성을 가진다. 이상적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긍정적 결과에 민감하며 성공이나 획득과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데 이를 향상초점(promotion focus)이라 한다. 한편, 의무적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며 안전확보와 실패방지에 집중하는데 이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이라 한다.

조절초점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계발 동기를 향상적 자기계발과 예방적 자기계발로 구분하여 대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허창구 2020)에서 향상적 자기계발은 불안이나 차별에 대한 편견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예방적 자기계발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상적 자기계발동기를 가진 사람이 예방적 자기계발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 모두 진로관련 인식(성숙도)과 행동(결정, 준비행동)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경향성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예방적 자기계발과 향상적 자기계발을 상호배타적인 유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향후 진로나 직업준비에 대해서는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동기적 기능을 지닌다고 해석하며 이를 건전한 자기계발로 구분하는 한편, 불안에 기반한 강박적 자기계발을 부정적 자기계발로 구분하였다.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과 완벽주의 경향성의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Elliot(1999)의 연구에서 숙달목표지향성과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나, 숙달목표 지향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도 숙달목표지향이 향상적 자기계발과 높은 상관관계($r=.64$)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과제의 숙달을 위해 노력하는 숙달목표지향성을 향상적 자기계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한다면, 향상적 자기계발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절초점과 강점인식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Higgins(1996)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Leonardelli 외(2007)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향상초점 목표를 설정한다고 주장했다. 강점인식은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조남근, 2016) 강점인식이 높은 사람은 향상초점적 계획과 동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결과를 최대화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Baumgardner 1990), 그로 인해 예방초점의 동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강박적 자기계발

‘강박’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박행동이란 불안한 느낌이나 괴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의 수준이 명백히 지나친 경우를 말한다(Reed et al. 1985; 신민섭 외 2007). 과도한 자기계발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조혜영 2015)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강박행동의 개념과 일관된 면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박적 자기계발동기는 불안 및 차별에 대한 편견과 정적 상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허창구 2020). 이러한 결과는 자기계발이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외현적 행동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인 심리적 현상에서는 상이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비해 강박적 자기계발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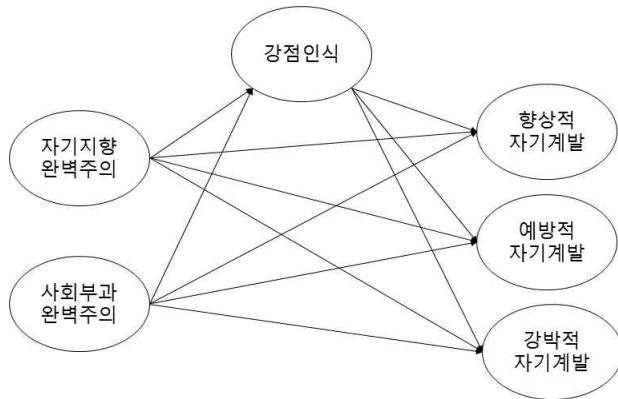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박적 자기계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및 그 하위요인 간 상관을 분석한 연구(Stoeber, Feast, and Hayward, 2009)의 결과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의 하위요인인 걱정(worry)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자신감 부족(lack of confidence)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Hewitt 외(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모두 정신병리학적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여준 바 있으며,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도 강박적 자기계발은 걱정(worry) 및 불안(anxiety)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불안 및 걱정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보이는 완벽주의와 강박적 자기계발은 서로 간에도 관련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자기계발 유형의 발생에 관여하는 기질적 및 인지적 영향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다차원 완벽주의(자기지향, 사회부과)가 자기계발(향상적, 예방적, 강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차원 완벽주의가 인지적 과정인 강점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 간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자기계발 유형은 최근(허창구 2020)에 제안된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주의 및 강점인식과의 관계의 방향성을 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방적 및 강박적 자기계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기존의 조절초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한 허창구(2020)의 연구에서도 가설과 달리 예방적 자기계발도 향상적 자기계발만큼이나 진로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나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 뿐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패를 회피하려는 예방적 자기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며, 완벽주의의 특성상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강박적인 자기계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변인 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다차원 완벽주의는 자기계발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다차원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다차원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매개역할을 보여주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I.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이며, 모형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에는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첫째, 각 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둘째,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으며,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

(AVE)와 개념신뢰도(CR)를 계산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로 변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측정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측정문항은 3~4개의 문항묶음(parceling)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각 변인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부트스트래핑(10,000회)을 실시하여 구조모형의 유의한 경로 중에서 계수 크기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관심 계수 쌍의 차이검증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매개효과(완벽주의-강점인식-자기계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대상은 편의표집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전국 대학생이었다. 총 21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중복으로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명을 제외한 총 20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81명(38.8%), 여자 128명(61.2%)이었으며,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75명(35.9%), 2학년 44명(23.4%), 3학년 41명(19.6%), 4학년 49명(23.4%) 순이었다.

3. 측정 도구

1) 다차원 완벽주의

다차원 완벽주의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은 7점 Likert식이다. 본 연구는 개인 스스로에 대한 완벽주의가 자신의 강점인식 및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 15문항을 제외한 자기지향 완벽주의(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15문항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예: 내가 일을 훌륭하게 못해내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86, 사회부과 완벽주의 .75이었다.

2) 자기계발 유형

자기계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허창구(2020)가 개발한 것으로 3가지 자기계발 유형(향상적, 예방적, 강박적)의 수준을 측정한다. 동 연구자는 Neubert 등(2008)이 개발한 WRFS(Work Regulatory Focus Scale)를 기반으로 자기계발 동기의 세 가지 하위차원(목표, 과정, 결과)의 의미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향상적 자기계발 9문항(예: 나는 내가 희망하는 미래 모습에 도움 되는 계발을 우선시한다.)과 예방적 자기계발 9문항(예: 나는 미래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계발하는 편이다.)을 개발하였다. 또한 강박적 자기계발 12문항(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다.)은 여가강박 척도(윤지연 외 2013), 일중독 척도(한국노동패널조사 2014; Aziz et al. 2013), 비합리적 수행신념 척도(Turner et al. 2016)의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하위개념(강박, 고정관념)을 도출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향상적 자기계발 .78, 예방적 자기계발 .79, 강박적 자기계발 .88이었다.

3) 강점인식

강점인식은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하고 김민정(2014)이 번안한 강점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며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단일요인으로 측정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나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은 7점 Likert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었다.

IV.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7점 척도로 측정된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평균은 3.71~4.91 범위에서 나타났고, 5점 척도로 측정된 자기계발 유형의 평균은 3.08~3.80 범위를 보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별이나 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이는 완벽주의, 강점인식, 자기계발이 대학생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변인임을 말해준다. 모든 측정변인의 첨도와 왜도를 확인한 결과 첨도는 -61~1.11, 왜도는 -.56~.11로 절대값이 각각 7과 2를 넘지 않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한 다변량 정상성(multivariate normality)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추가적으로 두 가지 완벽주의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M=4.57 \pm .90$)가 사회부과 완벽주의($M=3.71 \pm .7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t=14.06, p<.001$). 세 가지 자기계발 유형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으며($F=96.38, p<.001$), 사후검증(tukey)을 실시한 결과 향상적 자기계발과 예방적 자기계발 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향상적 자기계발($M=3.68 \pm .61$)과 예방적 자기계발($M=3.80 \pm .59$)이 강박적 자기계발($M=3.08 \pm .8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85, p<.001$; $t=12.93, p<.001$).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부적응적인 변인들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사회부과 완벽주의나 강박적 자기계발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강박적 자기계발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여전히 사회적 평가와 불안에 기초한 자기계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N=209)

	1	2	3	4	5	6
1.자기지향 완벽주의	(.86)					
2.사회부과 완벽주의	.42**	.75)				
3.강점인식	.07	-.29**	(.91)			
4.향상적 자기계발	.23**	-.02	.42**	.79)		
5.예방적 자기계발	.49**	.26**	.24**	.43**	(.78)	
6.강박적 자기계발	.52**	.49**	-.07	.18**	.40**	(.88)
평균	4.57	3.71	4.91	3.80	3.68	3.08
표준편차	.90	.72	1.19	.59	.61	.82
왜도	-.11	-.14	-.36	-.21	.11	.08
첨도	-.25	.15	-.41	.06	-.36	-.32

* $p < .05$, ** $p < .01$, (Cronbach's α)

〈표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및 차이검증

변인	남자 (N=81)	여자 (N=128)	t	저학년 (N=119)	고학년 (N=90)	t
자기지향 완벽주의	4.45	4.65	-1.57	4.62	4.53	.92
사회부과 완벽주의	3.76	3.68	.77	3.71	3.71	-.00
강점인식	5.11	4.79	1.88	4.90	4.94	-.20
향상적 자기계발	3.74	3.64	1.16	3.69	3.67	.23
예방적 자기계발	3.85	3.76	1.14	3.81	3.78	.40
강박적 자기계발	2.97	3.15	-1.58	3.07	3.09	-.16

2. 측정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를 통해 수

렴타당도를 확인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3).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223.536(df=137)$, $CFI=.968$, $TLI=.960$, $SRMR=.048$ 으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695~.895 범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01$), 평균분산추출(AVE)은 .555~.777로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개념신뢰도(CR) 역시 .788~.916으로 .70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가 $-.29\sim.49$ 로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아 변별타당도 역시 확인되었다.

〈표 3〉 측정타당성 검토를 위한 요인부하량, AVE, CR

잠재변인	측정변인	요인부하량	AVE	CR
자기지향 완벽주의	Parcel 1	.873	.699	.874
	Parcel 2	.821		
	Parcel 3	.812		
사회부과 완벽주의	Parcel 1	.771	.555	.788
	Parcel 2	.695		
	Parcel 3	.766		
강점지각	Parcel 1	.801	.732	.916
	Parcel 2	.862		
	Parcel 3	.885		
	Parcel 4	.872		
향상적 자기계발	Parcel 1	.858	.658	.852
	Parcel 2	.810		
	Parcel 3	.762		
예방적 자기계발	Parcel 1	.808	.598	.816
	Parcel 2	.753		
	Parcel 3	.757		
강박적 자기계발	Parcel 1	.876	.777	.913
	Parcel 2	.873		
	Parcel 3	.895		

3. 구조모형 검증 및 경로계수 비교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으며(표 4),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236.300(df=140)$, $CFI=.959$, $TLI=.950$, $SRMR=.058$ 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발견되어(그림 3)과 같이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41.392(df=143)$, $CFI=.959$, $TLI=.950$, $SRMR=.062$ 으로 양호했으며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두 모형은 설명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Delta\chi^2(3)=5.092$, $p=.165$).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해석하였다.

수정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첫째,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향상적 자기계발($\beta=.271$, $p<.01$), 예방적 자기계발($\beta=.594$, $p<.001$), 강박적 자기계발($\beta=.408$, $p<.001$)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박적 자기계발($\beta=.376$, $p<.001$)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적응적 자기계발 즉, 성장을 추구하는 향상적 자기계발과 실패방지를 추구하는 예방적 자기계발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불안과 고정관념에 근거한 부적응적 자기계발인 강박적 자기계발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의 높은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적응적 자기계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적응적인 자기계발 즉, 강박적 자기계발만을 높인다는 것은 대학생의 자기계발에 있어 특히 사회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부정적인 선행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을 높이는데($\beta=.350$, $p<.001$) 반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22$, $p<.001$). 다시 말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대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과 사회의 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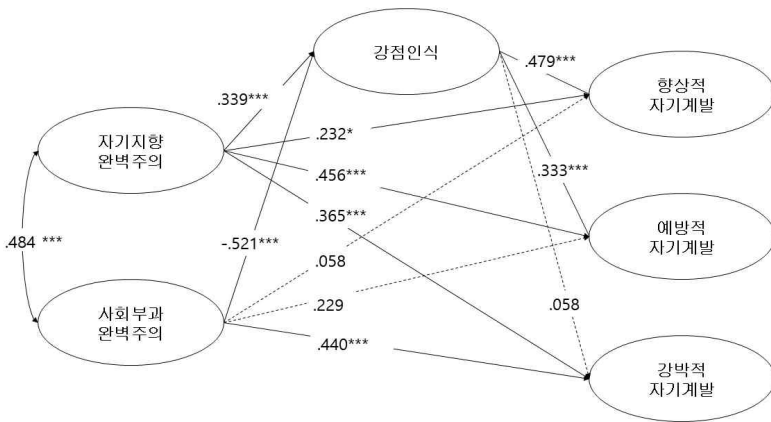
중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학생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었다. 셋째, 강점인식과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향상적 자기계발($\beta=.452, p<.001$)과 예방적 자기계발($\beta=.234, p<.01$)을 향상시키지만 강박적 자기계발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점인식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의 적응적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강박적 자기계발이 강점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강박적 자기계발이 불안 등의 정서요인에 영향을 받는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중에서 의미있는 비교쌍에 대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경로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했다(표 5). 첫째,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을 증가시키는 효과(A1)에 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을 감소시키는 효과(A2)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415, \text{Bootstrap CI } -.360\sim-.127$). 둘째,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과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강점인식이 예방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B2)에 비해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B1)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126, \text{Bootstrap CI } .034\sim.223$). 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이 높은 대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고 실패를 회피하는 방식의 예방적 자기계발 노력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새로운 강점을 위해 도전하는 방식의 향상적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세가지 자기계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향상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C1)에 비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예방적 자기계발(C2)을 높이는 효과($B=-.192, \text{Bootstrap CI } -.307\sim-.077$)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을 높이는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183, \text{Bootstrap CI } -.370\sim-.021$),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예방적 자기계발(C2)과 강박적 자기계발(C3)에 미치는 효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B=.009, \text{Bootstrap CI } -.166\sim.164$).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도전적 자기계발 방식(향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완벽추구의 특성으로 인해 위험회피적인 자기계발 방식(예방적)이나 과도한(강박적) 자기계발의 형태로 나타나는 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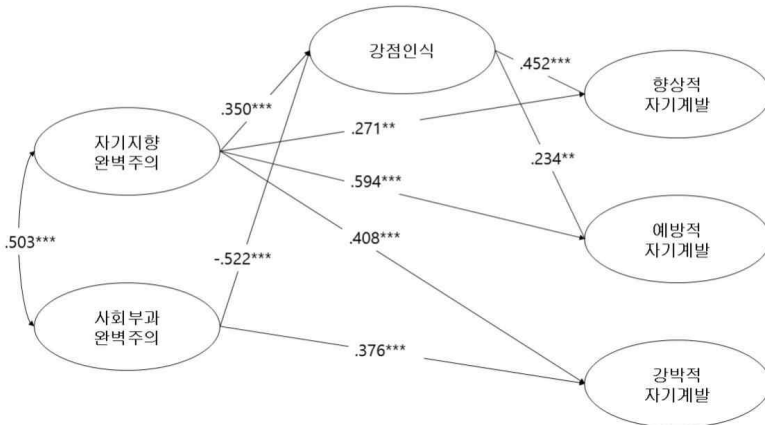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연구모형	236.300	140	.959	.950	.058
수정모형	241.392	143	.959	.950	.062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표 5〉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경로	Effect (B)	SE	95% CI	
			LLCI	ULCI
A1 자기지향 완벽 → 강점인식	.464	.126	.222	.726
A2 사회부과 완벽 → 강점인식	-.880	.173	-1.237	-.560
효과차이 (A1+A2)	-.415	.164	-.756	-.114
B1 강점인식 → 향상적 자기계발	.240	.042	.157	.323
B2 강점인식 → 예방적 자기계발	.113	.044	.029	.202
효과차이 (B1-B2)	.126	.048	.034	.223
C1 자기지향 완벽 → 향상적 자기계발	.191	.061	.078	.317
C2 자기지향 완벽 → 예방적 자기계발	.382	.053	.286	.494
C3 자기지향 완벽 → 강박적 자기계발	.374	.084	.230	.558
효과차이 (C1-C2)	-.192	.059	-.307	-.077
효과차이 (C1-C3)	-.183	.087	-.370	-.021
효과차이 (C2-C3)	.009	.084	-.166	.164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강점인식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총 4개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표 6). 결과적으로 강점인식은 자기지향 및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향상적 자기계발($\beta=.271$)과 예방적 자기계발($\beta=.594$)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동시에 강점인식을 매개로 향상적 자기계발($\beta=.158$, *Bootstrap CI* .073~.243)과 예방적 자기계발($\beta=.082$, *Bootstrap CI* .011~.153)에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미

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높임으로써 적응적인 자기계발을 간접적으로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직접효과를 지니지 않았지만, 강점인식을 매개로 향상적 자기계발($\beta = -.236$, *Bootstrap CI* $-.346 \sim -.125$)와 예방적 자기계발($\beta = -.122$, *Bootstrap CI* $-.217 \sim -.027$)에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부적응적인 강박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강점인식을 낮춤으로써 긍정적인 자기계발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완벽주의 → 강점인식 → 자기계발)	<i>Effect</i> (β)	<i>SE</i>	<i>95% CI</i>	
			<i>LLCI</i>	<i>ULCI</i>
자기지향 → 강점인식 → 향상적	.158** *	.043	.073	.243
자기지향 → 강점인식 → 예방적	.082*	.036	.011	.153
사회부과 → 강점인식 → 향상적	-.236* **	.056	-.34 6	-.12 5
사회부과 → 강점인식 → 예방적	-.122*	.049	-.21 7	-.02 7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계발 노력에 관여하는 기질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질적 요인인 다차원 완벽주의(자기지향, 사회부과)가 인지적 요인인 강점인식을 통해 자기계발 유형(향상적,

예방적, 강박적)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 간 관계의 속성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 완벽주의와 강점인식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을 증가시키는데 반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점인식을 감소시켰으며, 영향력의 비교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긍정적 영향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강점인식이 자신의 기준보다 사회적 기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로의 강점이 비교되는 경쟁환경에서 5대 스펙, 8대 스펙 등 표준화된 사회기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결과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도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자격증, 영어성적 등의 사회적 요구(소위, 스펙)에 의해 결정된다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거나 사회적 기준이 강조되는 환경일수록 대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강점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사회적 비교나 평가상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도 강점인식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정적 상관(김희영 외 2017; 이지혜 2014)을 보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부적 상관(이애리 외 2019; 이지혜 2014)을 보인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확인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강점인식이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진로성숙도, 진로적응성 등의 긍정적인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김민정 외 2014; 조남근 외 2016)에 비추어 볼 때, 강점인식을 감소시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진로 및 취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모든 자기계발 유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향상적 자기계발 보다 예방적 및 강박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완벽을 위한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기계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방지나 불완전한 수행에 대한 회피 등 완벽주의 고유의 강박적인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은 정서와의 관련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긍정정서 뿐 아니라 부정정서와 모두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외 2006; 이미화 외 2002).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우울성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Burns(1980)의 주장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강박적 자기계발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미래의 성공에 대해 덜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Flett et al. 1995; Ferrari et al. 1995)와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을 높여 그 결과 적응적 자기계발보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강박적 자기계발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점인식과 자기계발 유형의 관계에서 강점인식은 항상적 자기계발과 예방적 자기계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박적 자기계발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자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 강점인식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항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은 적응적인 자기계발이라 볼 수 있으며, 강점인식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한 강박적 자기계발은 인지적 요인 이외에 다른 심리적 기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창구(2020)는 강박적 자기계발이 걱정 및 취업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 삶의 만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강박적 자기계발은 부정적인 정서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부적응적 자기계발이라 할 수 있으며, 강박적 자기계발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고정관념 수정 등의 인지적 개입과 더불어 불안감소와 같은

정서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강점인식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적인 완벽주의가 자기계발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인지적 요인(강점인식)의 역할을 확인한 점은 적응적 자기계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여지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강점인식은 완벽주의와 적응적 자기계발(향상적, 예방적)의 관계를 매개하므로 인지적인 개입을 통해 강점인식을 증진시킨다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이 향상되거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섯째, 허창구(202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향상적, 예방적, 강박적 자기계발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계발 유형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상적 자기계발 동기가 높은 사람도 강박적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점인식이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에만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를 보았을 때 향상적 및 예방적 자기계발은 강박적 자기계발과 개념적 차별성 뿐 아니라 영향기제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편의표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환경을 통제할 수 없었다. 모집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응답자의 자발적인 보고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응답자의 성별, 학년, 지역분포 등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 대학생의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국내 대학이 지역별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자기계발 유형이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지역에 따른 차이도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전국규모의 패널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전문조사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크기(N=209)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자기계발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허창구(2020)가 수행한 연구 1(N=298)과 연구 2(N=283)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자기계발 유형의 선행변인이나 결과변인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반복이나 대단위 표본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완벽주의와 자기계발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변인인 강점인식만을 고려하고 정서적인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 불안 등의 정서적 요인을 포함시킨다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물론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박적 자기계발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강점인식이 향상적 자기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향상적 자기계발 경향성이 강점인식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설문조사의 전형적인 한계이며 본 연구도 이러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경쟁의 일상화로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점차 증가(Curran et al. 2019)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 개인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Lloyd et al. 2015; Suh et al. 2019)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이나 고정관념을 수정함으로써 관점을 자기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의 강점을 부각시킨다면 대학생들의 적응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영.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탐색행동, 스펙 5종 별 준비정도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고은·윤용진·최재진·최대혁. 2012. “생활체육지도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성취목표성향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집 6호: 307-318.
- 김민정·이희경. 2014.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집 5호: 1811-1830.
- 김수림. 2014. “청소년의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계: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안국·강순희. 2004.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7집 1호: 1-25.
- 김지영·권석만. 2013.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집 4호: 783-802.
- 김현정·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집 2호: 345-361.
- 김희영·김완일. 2017. “군 간부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군 생활 만족과의 관계에서 강점 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집 10호: 407-428.
- 반준석. 2014. 『취업스펙과 조직 내 성과의 인과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성민경. 2014.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스트레스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송동림. 2009. “완벽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신학전망』 166집: 27-59.
- 신광영·문수연. 2012. “계급과 스펙경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권: 1-96.

- 신민섭·설순호. 2007. “강박장애의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7집 1호: 17-40.
- 윤지연·최승혁·허태균. 2013. “개인적 여가와 사회적 여가의 선순환: 여가재능 나눔을 통한 여가강박의 해소.” 『여가학연구』 11집 1호: 1-23.
- 이미화·류진혜. 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집 3호: 293-316.
- 송동림. 2009. “완벽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신학전망』 166호: 27-59
- 이수연. 1999. “자기수용과 자기존중감 및 성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애리·심혜원. 2019. “남자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체형불안의 관계에서 강점인식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집 9호: 53-77.
- 이지원·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집 1호: 205-228.
- 이지혜. 2014. “완벽주의 차원에 따른 강점 인식과 강점 활용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현주. 2011. “진로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7집 4호: 95-116.
- 잡코리아. 2020. “블라인드채용 확산에도... 구직자 78% ‘스펙 준비 중’.”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621&schCtgr=0&Page=49(검색일: 2020.11.17).
- 장성연. 2013. “수도권 소재 4 년제 대학 출신 대기업 입사자들의 스펙쌓기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정은숙·안귀여루. 2018.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청소년 수면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집 2호: 37-59
- 정태선. 2017.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자기관리, 경쟁불안의 관계.” 『한국체육학회』 56집 5호: 607-619.

- 조남근·권정희·정미예. 2016.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집 3호: 1-27.
- 조성인·김은애. 2014. “구직요건(SPEC)에 대한 기업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의 인식 차이.” 『취업진로연구』 4집 1호: 41-61.
- 조혜영. 2015.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능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연구』 5집 4호: 29-56.
- 채창균·최지희·김안국·오호영·옥준필. 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인적자원 개발(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커리어. 2019. “신입사원 업무 성과 ‘6개월~1년’ 걸린다.” http://www.career.co.kr/help/media_data_view.asp?rid=2891(검색일: 2020.11.19).
- 하정희·조한익. 2006.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완벽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집 4호: 873-896.
- 하정희·장유진.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집 2호: 427-449.
-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 “한국노동패널 1회서 22차년도 통합 설문지.” <https://tinyurl.com/udkh66z>(검색일: 2020.11.07.)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허창구. 2020. “스펙경쟁 사회에서 자기계발 동기와 자기계발 강박이 취업준비생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3집 1호: 93-117.
- 황여정·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집 2호: 1-23.
- 황진철·전병관. 2013.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의 완벽주의 성향, 자기관리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2집 6호: 615-629.

- Aziz, Shahnaz., Ben Uhrich, Karl L. Wuensch, and Brian Swords. 2013.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Emphasizing work-life imbalance and addiction in the measurement of workaholism." *Journal of Behavioral and Applied Management* 14(2): 71-86.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1062.
- Burns, Davi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Chang, Edward C., and Kevin L. Rand.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29-137.
- Curran, Thomas., and Andrew P. Hill. 2019. "Perfectionism is increasing over time: A meta-analysis of birth cohort differences from 1989 to 2016." *Psychological Bulletin* 145(4): 410-429.
- Dunkley, David M., Kirk R. Blankstein, Jennifer Halsall, Meredith Williams, and Gary Winkworth.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 Ferrari, J. R., Judith L. Johnson, and William G. McCown.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Flett, Gordon L., Paul L. Hewitt, Kirk Blankstein, and Sean O'Brien.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61-68.
- Flett, Gordon L., Paul L. Hewitt, and Thomas R. Martin. 1995.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113-136. Boston, MA: Springer.
- Gardner, H. 1997. "Six afterthoughts: Comments on" varieties of intellectual talent."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1(2): 120-124.
- Govindji, Reena., and P. Alex Linley. 2007.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2): 143-153.
- Habke, A. Marie., Paul L. Hewitt, and Gordon L. Flett. 1999. "Perfectionism and Sexual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1: 307-322.
- Hewitt, Paul L., and Gordon L. Flett.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aul L., and Gordon L. Flett. 2004. "Perfectionism, Cognition, and Affect in Response to Performance Failure vs. Succ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2: 297-324.

- Higgins, E. T. 1996. "(1996).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02
- Higgins, E. Tory., James Shah, and Ronald Friedman. 1997. "Emotional responses to goal attainment: strength of regulatory focus as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515-525.
- Higgins, E. Tory.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46.
- Leonardelli, Geoffrey J., Jessica L. Lakin, and Robert M. Arkin. 2007. "Regulatory focus model of self-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6): 1002-1009.
- Linley, P. A. 2008. "*Average to A⁺: realising strengths in yourself and others.*" Coventry: CAPP Press.
- Linley, P. Alex., Karina M. Nielsen, Raphael Gillett, and Robert Biswas-Diener. 2010. "Using signature strengths in pursuit of goals: Effects on goal progress, need satisfaction, and well-being, and implications for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5(1): 6-15.
- Lloyd, Samantha., Ulrike Schmidt, Mizanur Khondoker, and Kate Tchanturia. 2015. "Ca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reduce perfectionis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3(6): 705-731.
- Lopez, S. J. 2008.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Vol 1: Discovering human strengths.* Praeger Publishers/Greenwood Publishing Group.

- Lopez, Shane J., Jennifer T. Pedrotti, and Charles R. Snyder. 2018.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 Sage Publications.
- Muliasari, Mona, Sugiyo Sugiyo, and Sunawan Sunawan. 2019.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Perfectionism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Bimbingan Konseling* 8(3): 92-99.
- Neubert, Mitchell J., K. Michele Kacmar, Dawn S. Carlson, Lawrence B. Chonko, and James A. Roberts. 2008. "Regulatory focus as a mediator of the influence of initiating structure and servant leadership on employe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6): 1220-1233.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390.
- Park, Heerak, Bo Young Choi, Suk Kyung Nam, and Sang Min Lee. 2011. "The role of career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South Korean undergraduate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8(1): 27-36.
- Reed, Alan E., and Frank Weinhold. 1985. "Natural localized molecular orbitals."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83(4): 1736-1740.
- Rh eaume, Jos ee., Mark H. Freeston, Michel J. Dugas, H el ene Letarte, and Robert Ladouceur. 1995. "Perfectionism,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7): 785-794.
- Rice, Kenneth G., Jeffery S. Ashby, and Robert B. Slaney.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Suh, Hanna., Harim Sohn, Taeyoung Kim, and Dong-gwi Lee. 2019.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perfectionism interventions: Comparing face-to-face with online modal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4): 473-486.
- Stoeber, Joachim., Alexandra R. Feast, and Jennifer A. Hayward. 2009.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test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423-428.
- Turner, Martin J., Mark S. Allen, Matthew J. Slater, Jamie B. Barker, Charlotte Woodcock, Chris G. Harwood, and Ken McFayden. 201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irrational performance beliefs inventory (iPBI).”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4(3): 174-180.
- West, Stephen G., John F. Finch, and Patrick J. Curran.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Sage Publications, Inc.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the Strength Knowledge and Self-development Types

Donggeon Kim·Hanseul Kim·Gyutae Kim

Minho Chae·Eunjeong Park*·Changgoo H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ir temperamental factors and cognitive factors on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efforts. For this purpos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strength knowledge on various types of self-development (promotive, preventive, obsessive) were examin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oriented perfectionism increased strength knowledge, whil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lowered strength knowledge. Seco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increased all types of self-development, bu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increased obsessive self-development. Third, strength knowledge increased promotive and preventive self-development, but it did not show any relationship with obsessive self-development. Fourth, the strength knowledge mediated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promotive and preventive self-development. In conclusion, promotive and preventive self-development based on strength knowledge can be seen as adaptive self-development, and obsessive self-development based on anxiety caused b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can be seen as maladaptive self-development. The main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id not include emotional factors along with temperamental factors and cognitive factors, so it does not confirm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self-development type.

Keywords :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trength knowledge, self development

투고일: 2021.01.30. 심사일: 2021.02.26. 게재확정일: 2021.03.12.

* BA Student, Daegu Catholic University

**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3.6.1.65>**【연구논문】**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유라*·이은주**

논문요약

최근의 대학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능력을 길러주는 역량기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기반교육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시킬 수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의 사례를 통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서토론활동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해보고 그 활용 가능성을 가능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D대학의 6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인 '글로벌역량'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고, 하브루타 토론방식을 차용하여, D대학 학생들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였다. 약 2달간의 독서토론활동에 참여한 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전후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향후 독서토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토론 후 상당 부분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 6개 중 하나의 역량에 집중하여 도서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주제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비교과 교육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독서토론활동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서의 성격에 맞춘 다양한 독서토론활동 방법이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핵심역량, 비교과 교육, 독서토론, 독서활동, 하브루타 토론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오늘날 대학은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보편적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능력을 길러주는 역량기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논의는 2005년 OECD가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를 통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능력(Collaboration)을 미래인재 핵심역량으로 선정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이 핵심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인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를 개발하였으며(최정윤 외, 2013), 한국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도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개발하는 등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역량기반교육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규 교과과정의 체계적인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교과영역에서 다루지 못한 지식 습득 외에 다양한 경험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제발시킬 수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편적인 예로 최근 교육부의 대학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기반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비교과 교육의 체계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등의 재정지원사업 뿐 아니라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도 대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역량기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유무 뿐 아니라 교과 교육과 비교과 교육의 균형 있는 구성과 운영이 중요 평가지표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 2020).

실제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국외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 및 동료 학우들과의 교류, 세미나, 인턴십 등과 같은 교육활동, 동아리 또는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해외연수 등과 같은 비교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및 대인관계 발달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Pascarella et al. 2005). 국내에서도 다양한 비교과 교육 활동이 대학생활만족도(김명용 2012; 조성희 2007), 학업성취도(최진영 외 201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재은·박혜진 2019), 융합적사고력(김지일 외 2015)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백상현 2020).

이처럼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성과 더불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내는 등의 검증연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서토론활동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해보고 그 활용 가능성을 기능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 및 비교과 교육활동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독서토론 활동의 개념과 유형 및 유용성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D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양성에 중점을 둔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고, 실제로 약 2달간의 독서토론활동을 진행 한 후 그 효과성을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정리하여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서토론활동이 비교과 교육으로써 대학의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양성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김현우 외 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능력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핵심역량이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을 직무와 관계없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역량이라 정의하였다(OECD 2002).

각 나라에서는 그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학생들이 삶, 학업, 직무 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대학교육에서 제대로 양성되었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또한 개발하고 있다. OECD의 AHELO(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미국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와 MAPP(Measure of Academic Proficiency and Progress), 호주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가 대표적인 지표이다(정운숙 외 2019). 한국에서도 6개의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평가도구인 K-CESA를 구축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핵심역량 구성내용

구분	핵심역량
AHELO (OECD)	전공능력, 사고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CLA (미국)	비판적 사고, 분석적 추론, 문제해결능력, 전공능력, 글쓰기능력
GSA (호주)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대인관계능력
K-CESA (한국)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활용,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K-CESA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역량은 자가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

터링하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역량은 조직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원정보 기술활용역량은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할당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역량이란 국제적 소양, 상식, 이문화 대처 능력, 국제 매너 및 에티켓 등 국제적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이다. 의사소통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종합적사고력은 모호하거나 다면적인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일련의 정신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각 대학의 상황과 교육목표에 맞추어 다시 재정립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2.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한안나 2017).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인성 및 소양, 사회봉사, 취업 및 진로지도, 학업지원 등과 관련된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지일 외 2014). 2021년 예정되어 있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야기 한다.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심리적 건강과 진로 탐색,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의 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또한 운영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교과 연계 비교과 활동과 일반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정미 외 2019). 교과 연계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과목과 연계하여 심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팀 프로젝트, 공모전 혹은 자격증 준비 과정, 현장견학 및 답사 등을 위한 정규 수업시간 외의 활동들이다. 일반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과목과 별개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각종 특강, 동아리, 모듬활동, 멘토링, 봉사활동 등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한안나 2017).

핵심역량의 영역에 맞추어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김혜영 등은 K-CESA진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양성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습관련, 관계영역, 글로벌영역, 기타 영역으로 그 내용을 구분하기도 하였다(김혜영 외 2013).

3. 독서토론

독서토론(book discussion)은 독자가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호작용 활동을 의미한다(한국어문교육연구소 외 편 2006, 179). 독서토론은 토론 구성원들이 특정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논의할 문제를 도출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비판능력 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도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독서토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김승환은 독서토론의 장점을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①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② 책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③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④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민주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으며, ⑤ 발표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미덕을 기를 수 있으며, ⑥ 독서 치료적인 차원에서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승환 2004, 5).

또한, 구자황은 대학생에게 독서토론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사회진출 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독서 토론

교육은 단순히 화법이나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의 가능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나와 주변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다른 이의 체험과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나아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수사적 맥락을 고려해가며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자황, 2007).

이러한 독서토론은 활용되는 도서의 내용에 따라 지식의 습득에 의한 학습적인 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학교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독서토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Ⅲ. 독서토론활동의 설계 및 수행

1. 독서토론을 위한 도서선정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을 사례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토론활동을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D대학의 핵심역량을 정리하고 그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독서토론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였다.

D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6개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6가지 핵심역량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신의 강점, 약점을 스스로 판단라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직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계발하는 자기경영역량,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지역과 세계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글로벌역량, 타인에 대한 관용, 배려,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나눔역량, 합리적 이성 과 공감적 감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소통역량,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원적으로 사고하고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창안하는 융합역량,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능동적으로 계발하고 실천하는 도전성취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글로벌역량”을 중심으로 도서를 선정하고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였다. 이처럼 “글로벌역량”을 선택적으로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한 이유는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에서 유래하는 조어(造語)로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이다.

〈표 2〉 글로벌역량의 의미

핵심 역량	최종 목표	수행 주체	구체적인 수행목표		수행의 성격
			학습단계	내용	
글로벌	사회(지역과 세계)에 관여	학습자 개인	이해	현대사회의 이해(*경제, 사회, 문화, 산업, 테크놀로지, 직업세계 등)	도구적 지식 습득
			전략 (도구)	전공지식의 심화, 어학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관련된 자격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개념을 상정하고 지역과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로 지역과 국제적 ‘환경문제’, ‘관계’,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추출하고, 생성된 중심 키워드를 확장시켜 세부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키워드에서는 국민경제, 경제거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교환 등의 세부주제를 환경문제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인류세 등으로 세부주제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①국가단위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물협회 등의 추천목록과, ②각 대학에서 배포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 ③키워드와 관련한 전문적인 도서 및 학술잡지 등을 참조하여 총 32권의 권장도서를 선정하였다.

2. 독서토론 방법 선정

독서 토론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교육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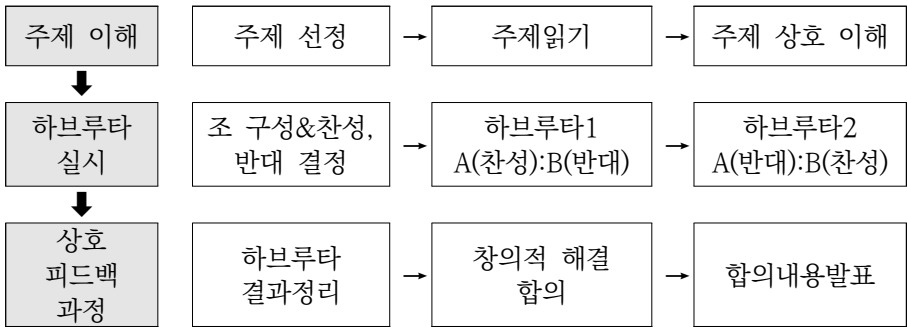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독서토론은 교사에 의해 텍스트 중심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이영호 2017). 이에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활동의 고취를 위해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독서토론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토론교육이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과 같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필요가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및 사례 관련 정보가 폭넓게 교환되지는 못해왔다(박상준 2009). 물론 사례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상민(2016)은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증진프로그램 중 ‘독서토론클럽’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임성관(2019)은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을 위한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 24회로 구성된 독서회 운영 계획하고 있었는데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하고 있다. 세 축은 ‘독서토론’,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례 모두 독서토론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만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독서토론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다. 즉, 독서토론 모형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대학생을 위한 독서토론을 구조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다양한 주제의 토론교육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적용되고 있는 하브루타식 토론기법을 참조하여 독서토론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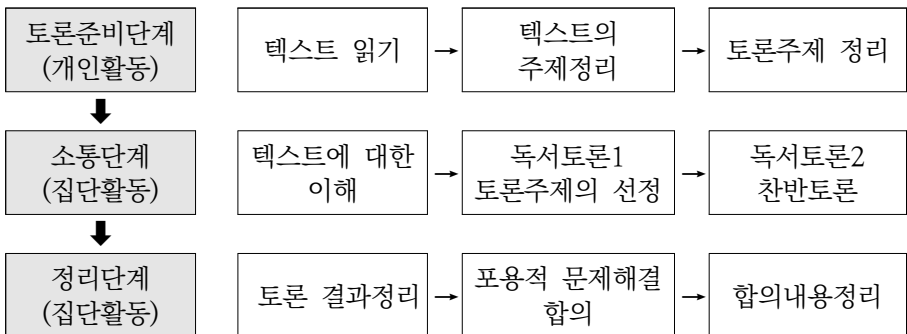
하브루타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던 유대인의 일반적인 토론 교육 방법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교체하여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Kent and Allison, 2012). 하브루타 활동은 찬반으로 나누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감으로써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과 동시에,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독서토론교육에 적용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헤츠키 등(2014)은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을 진행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토론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 1>과 같이 토론 전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상호 이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토론방법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1> 하브루타 교육법의 운영 과정(헤츠키 외 2014, 112)

본 연구에서는 헤츠키 등의 도식을 참고하여 주제이해과정을 개인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토론준비단계’로 집단 간의 독서토론과 상호 피드백 과정을 ‘소통과 정리단계’로 정리하여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 하브루타를 적용한 독서토론 순서도

첫 번째 단계인 토론준비단계에서는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읽고 그 자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토론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두 번째 소토론단계에서는 집단 활동을 통해 텍스트에 대해 각자 이해한 것을 의논하고 독서토론 주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 토론주제를 찬반의 형식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 단계인 정리단계에서는 앞선 토론과정의 결과를 정리하고 찬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포용적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토론일지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정리하였다.

IV. 독서토론활동의 효과와 개선점

1. 독서토론활동의 개요

독서토론을 위해서 총 9개의 독서토론 활동 팀을 구성하였다. 각 팀별로 3~4명으로 구성되어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토론은 2020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2달간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팀 결성을 하고 주어진 32권의 권장도서목록을 보고 토론할 책 2권을 선정한다. 팀의 토론 목표와 도서를 선정한 이유 및 향후 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 ② 각 팀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향후 보다 유용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과 효과적인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③ 팀원들의 각각은 동아리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책의 주제와 생각해볼 문제를 정리한다. 이때 제공된 개인활동지를 꼼꼼히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정리해둔다.
- ④ 개인활동지를 바탕으로 집단 토론을 할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각각의 개인별 관점의 현상, 사실, 추측, 설명을 정리하고 도록 한다. 서로 찬반의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사고를 확장해간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한다. 합의된 의견과 합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팀별 활동지에 면밀히

기술한다.

- ⑤ 동아리별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 다른 동아리의 성과를 공유한다.
- ⑥ 독서 활동 후 선정도서에 대한 난이도 설문과 더불어 독서토론 활동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

2. 독서토론의 효과 검증

독서토론 수행 후, 역량개발 및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 활동 전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역량에 대한 그들의 평소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D대학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② 핵심역량 중 집중적으로 수행했던 독서토론 영역인 글로벌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③ 인적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문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독서토론 효과검증을 위한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세부 문항	문항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D대학교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정도	6
	D대학교 핵심역량의 교육정도	6
	D대학교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역량정도	6
글로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국제사회(국제환경, 국제관계, 국제사회 문제 등)에 관한 문항	3
	지역사회(지역환경, 지역사회 문제 등)에 관한 문항	3
	글로벌 용어에 대한 이해정도	1
개인에 관한 문항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	2
총 문항		27

독서토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을 2차례 수행하였다. 설문은 독서토론 이전인 2020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1차례 실시하였으며, 약 2달 간 토론활동 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다시 온라인으로 1차례 더 진행하였다. 설문참여자는 독서토론 활동 대상자인 총 35명의 D대학 학생을 대상이었으며, 구체적인 설문응답자는 <표 4>와 같이 남자 14명, 여자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 3학년 26명, 4학년 9명이었다.

<표 4>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통계

	남자		여자		3학년		4학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응답자	14	40.0	21	60.0	26	74.3	9	25.7

데이터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였는데,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평소 인식과 독서토론의 효과 검증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확보하였으며, 교차분석(Chi-square 검증)을 통해 독서토론 활동과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 사이의 통계적 유의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지표인 “6개의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정도”를 독서토론 수행 전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6개 역량 중 5개의 역량에서 $p \leq 0.05$ 에서 독서토론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독서토론에 따른 핵심역량의 이해도의 차이가 상당 부분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의 이해정도 관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핵심역량의 이해정도	자기경영역량	7.878	3	0.049
	글로벌역량	10.226	3	0.017
	나눔역량	7.843	3	0.049
	융합역량	4.529	3	0.210
	도전성취역량	10.585	3	0.014
	소통역량	12.103	3	0.007

독서토론 참여에 따른 핵심역량 이해정도의 차이는 기술통계량을 참조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역량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이해정도”는 독서토론 수행 전후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였다. 특히 6개 모든 역량에서 독서토론 전에는 보통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독서토론 후에는 ‘매우 잘 이해한다’ 혹은 ‘잘 이해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각 역량별 이해정도는 독서토론 이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6〉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정도 - 기술통계량

		매우 잘 이해		잘 이해		보통		잘 이해 하지 못함		전혀 이해 하지 못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서 토론 수행 전	자기경영역량	3	8.6	11	31.4	16	45.7	5	14.3	0	0.0
	글로벌역량	1	2.9	12	34.3	17	48.6	5	14.3	0	0.0
	나눔역량	5	14.3	12	34.3	14	40.0	4	11.4	0	0.0
	융합역량	4	11.4	8	22.9	17	48.6	6	17.1	0	0.0
	도전성취역량	5	14.3	8	22.9	16	45.7	6	17.1	0	0.0
	소통역량	7	20.0	11	31.4	13	37.1	4	11.4	0	0.0

독서 토론 수행 후	자기경영역량	9	25.7	16	45.7	8	22.9	2	5.7	0	0.0
	글로벌역량	7	20.0	18	51.4	8	22.9	2	5.7	0	0.0
	나눔역량	13	37.1	14	40.0	7	20.0	1	2.9	0	0.0
	융합역량	11	31.4	8	22.9	12	34.3	4	11.4	0	0.0
	도전성취역량	14	40.0	12	34.3	7	20.0	2	5.7	0	0.0
	소통역량	19	54.3	11	31.4	4	11.4	1	2.9	0	0.0

또한 실제 교육수요자인 대학생들이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정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 \leq 0.05$ 에서 총 6개 역량 중 2개의 역량에서 독서토론 활동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역량은 실제 독서토론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역량인 자기경영역량과 글로벌역량을 교차분석한 결과, 독서토론에 따른 핵심역량의 교육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 부분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표 7〉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의 교육정도 관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핵심역량의 교육정도	자기경영역량	10.638	3	0.014
	글로벌역량	7.673	3	0.043
	나눔역량	0.890	3	0.828
	융합역량	3.467	3	0.325
	도전성취역량	7.585	3	0.055
	소통역량	7.655	3	0.054

그러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정도와 관련하여 기술통계량을 확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2개 역량 외에도 일부 역량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가령,

〈표 8〉에 정리해 놓은 기술통계는 앞서 밝혀낸 자기경영역량과 글로컬역량에 대한 눈에 띄는 차이는 물론 도전성취역량이나 소통역량 또한 독서토론 전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토론에서 테마로 선정한 역량이 아니더라도 D대학에서 배양하고자 하는 역량이 독서토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보여 진다.

〈표 8〉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정도 - 기술통계량

		매우 잘 교육됨		잘 교육됨		보통		잘 교육 되지 않음		전혀 교육 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서 토론 수행 전	자기경영역량	4	11.4	12	34.3	17	48.6	2	5.7	0	0.0
	글로컬역량	1	2.9	14	40.0	18	51.4	2	5.7	0	0.0
	나눔역량	3	8.6	16	45.7	14	40.0	2	5.7	0	0.0
	융합역량	3	8.6	16	45.7	14	40.0	2	5.7	0	0.0
	도전성취역량	3	8.6	13	37.1	17	48.6	2	5.7	0	0.0
	소통역량	5	14.3	11	31.4	15	42.9	4	11.4	0	0.0
독서 토론 수행 후	자기경영역량	7	20.0	22	62.9	5	14.3	1	2.9	0	0.0
	글로컬역량	9	25.7	13	36.1	13	36.1	0	0.0	0	0.0
	나눔역량	5	14.3	17	48.6	11	31.4	2	5.7	0	0.0
	융합역량	7	20.0	17	48.6	8	22.9	3	8.6	0	0.0
	도전성취역량	7	20.0	20	57.1	7	20.0	1	2.9	0	0.0
	소통역량	7	20.0	20	57.1	7	20.0	1	2.9	0	0.0

또한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전성취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량에서는 $p \leq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교차분석 결과는 대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인식은 독서토론 수행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표 9〉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핵심역 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 도	자기경영역량	3.686	4	0.450
	글로벌역량	4.070	4	0.397
	나눔역량	2.285	4	0.684
	융합역량	8.867	4	0.065
	도전성취역량	15.002	4	0.005
	소통역량	4.667	4	0.323

위에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는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미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10〉의 각 역량별 함양정도의 기술통계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서토론 수행유무와 무관하게 토론에 참여한 35명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독서토론 수행 후 오히려 본인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으로, 2개월간의 독서토론만으로 핵심역량을 갖추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 - 기술통계량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서 토론 수행 전	자기경영역량	2	5.7	6	17.1	14	40.0	12	34.3	1	2.9
	글로벌역량	2	5.7	3	8.6	14	40.0	14	40.0	2	5.7
	나눔역량	3	8.6	11	31.4	14	40.0	6	17.1	1	2.9
	융합역량	3	8.6	7	20.0	15	42.9	7	20.0	3	8.6
	도전성취역량	1	2.9	3	8.6	25	71.4	4	11.4	2	5.7
	소통역량	3	8.6	10	28.6	15	42.9	7	20.0	0	0.0

독서 토론 수행 후	자기경영역량	0	0.0	8	22.9	11	31.4	13	37.1	3	8.6
	글로벌역량	1	2.9	0	0	18	51.4	13	37.1	3	8.6
	나눔역량	2	5.7	10	28.6	13	37.1	10	28.6	0	0.0
	융합역량	2	5.7	7	20.0	9	25.7	17	48.6	0	0.0
	도전성취역량	3	8.6	8	22.9	9	25.7	12	34.3	3	8.6
	소통역량	1	2.9	15	42.9	12	34.3	5	14.3	2	5.7

그렇다면 보다 실제적인 독서토론의 효과를 파악해보기 위해, 독서토론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영역 중 보다 인지도가 낮고 교육이 덜 수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글로벌역량을 사례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과연 독서토론이 해당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글로벌이라는 용어의 근간이 되는 두 용어, ‘로컬(local)’과 ‘글로벌(global)’을 근간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정도”와 “자료탐색정도”, “지인과의 관련 대화빈도”와 독서토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독서토론 후 사회에 대한 관심정도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반면 관련 자료의 탐색정도나 대화빈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독서토론과 국제/지역사회 관련 행동 변화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양측검정)
국제사회 관심정도	27.618	4	0.000
지역사회 관심정도	19.568	4	0.001
국제사회 자료탐색정도	7.198	4	0.126
지역사회 자료탐색정도	4.795	4	0.309
국제사회 관련 대화빈도	6.776	4	0.148
지역사회 관련 대화빈도	5.562	4	0.234

그러나 국제/지역사회 관련 행동 변화(관심정도, 자료탐색정도, 대화빈도)와 관련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표 12>와 같이 독서토론 수행 전후를 비교하여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문항에서 긍정의 응답이 많아진 반면 부정의 응답이 줄어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국제/지역사회 관련 행동 변화 - 기술통계량

		매우 관심 많음		관심 많음		보통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 관심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1	2.9	13	37.1	18	51.4	3	8.6	0	0.0
	독서토론 수행 후	11	31.4	20	57.1	2	5.7	0	0.0	2	5.7
지역사회 관심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2	5.7	9	25.7	20	57.1	4	11.4	0	0.0
	독서토론 수행 후	12	34.3	14	40.0	6	17.1	1	2.9	2	5.7
		매우 자주 탐색		자주 탐색		보통		거의 탐색안함		전혀 탐색 안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 자료탐색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0	0.0	18	51.4	10	28.6	6	17.1	1	2.9
	독서토론 수행 후	5	14.3	13	37.1	13	37.1	3	8.6	1	2.9
지역사회 자료탐색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1	2.9	13	37.1	14	40	7	20.0	0	0.0
	독서토론 수행 후	3	8.6	16	45.7	10	28.6	4	11.4	2	5.7
		매우 자주 대화함		자주 대화함		보통		거의 대화 안함		전혀 대화 안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 관련 대화빈도	독서토론 수행 전	2	5.7	12	34.3	15	42.9	5	14.3	1	2.9
	독서토론 수행 후	10	28.6	8	22.9	13	37.1	3	8.6	1	2.9
지역사회 관련 대화빈도	독서토론 수행 전	4	11.4	6	17.1	17	48.6	7	20	1	2.9
	독서토론 수행 후	5	14.3	13	37.1	9	25.7	6	17.1	2	5.7

추가적으로, 독서토론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구체적으로 독서토론을 수행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인 용어는 거의 유사하지만 독서토론 전 키워드가 16개인 반면 독서토론 후 키워드는 21개로 나타나 키워드들이 보다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토론 후에는 ‘글로벌’, ‘세계화’, ‘로컬’ 등과 같이 단순한 주제키워드와 더불어 ‘소통’, ‘융합’, ‘나눔’, ‘공감’, ‘협동’과 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관련한 키워드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글로컬 관련 키워드

독서토론 전			독서토론 후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1	글로벌	9	1	글로벌	9
2	국제사회	5	2	세계화	7
3	세계화	4	3	지역사회와 세계	3
4	지역사회	3		로컬	3
	로컬	3		지역사회	3
	외국어	3		지역특색	3
7	세계사회	2		소통	3
8	세계사회연결	1		융합	3
	전체적	1	9	국제사회	2
	지역성	1		세계경제	2
	미래사회	1		나눔	2
	지구촌	1	12	공동체	1
	다문화	1		글로벌 쉼터	1
	의사소통	1		지역가치	1
	회화	1		지역중심	1
창의력	1	다문화		1	
		연결		1	
		다양함		1	
		복합적		1	
		공감		1	
		협동		1	

결론적으로 대학에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량에 대한 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인식은 독서토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반면, 본인이 해당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독서토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실제 그다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서토론 후 토론테마와 관련된 관심의 정도는 증가하였으나 관련한 자료를 탐색하거나 지인과 관련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향후 독서토론활동을 위한 고려사항

그렇다면 독서토론을 보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염두 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된 독서토론에서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였는지를 하나 하나 검토해 봄으로써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토론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독서토론은 토론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토론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개월간의 독서토론을 수행해 온 3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근간으로 독서토론 과정상에 나타난 논의거리를 하나씩 짚어 보았다. 필요한 데이터는 독서토론 완료 후 온라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객관식 문항보다는 서술식 문항을 더 많이 구성함으로써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토론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2개월간의 독서토론을 수행한 이후 설문조사한 결과,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54.3%,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34.3%로 나타나 약 90% 대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독서토론을 수행하였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표 14〉 토론활동 시 겪은 어려움

	전혀 문제없이 진행		문제없이 진행		보통		어려움을 느낌		매우 어려움을 느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응답자	19	54.3	12	34.3	3	8.6	1	2.9	0	0.0

이처럼 응답자들은 독서토론 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지만 독서토론 과정에서 실제 겪었던 어려움을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독서토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그들의 경험에 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사항과 관련한 문제로 압축되었다.

먼저, 독서토론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제시한 도서목록과 관련한 고민을 언급하였다. 토론참여자의 대부분은 “책의 수준이 적절하고”, “책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가 현실 문제와 밀접한 시의성이 있으며”, “토론할 수 있는 논의거리 추출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도서목록이 좀 더 다양하여 책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나길 희망하며”, “책이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괴리감이 느껴졌고”, “토론거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도서들이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이유 모두 도서가 본인이 처한 현실과 밀접한 혹은 괴리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특히 적극적인 토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토론 주제의 도출이 용이한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2개월간의 독서토론을 위해 연구자들은 총 32권의 책을 추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제시한 책 목록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문제 중 하나가 토론테마 추출의 어려움이다. “독서토론은 주제토론보다 하나의 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책의 내용에 대한 산만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이승윤(2015)의 연구처럼, 독서토론에서의 테마선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을 위해 하브루타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의 토론이 모든 도서에 적용되기 어렵고”,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억지로 다양한 의견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의견과 같이, 토론테마의 발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학생들이 토로하였다. 가령,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토론테마의 경우 억지로 찬반을 나눠야 한다든지 반대 논리를 새로 개발해야한다든지 하는 토론방식은 독서토론 활동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독서토론의 운영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독서토론 방법에 대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강하게 토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면 “독서토론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17명(48.6%),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15명(42.9%)인 반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독서토론을 시작할 때 처음에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웠으며”, “토론을 책으로만 배우고, 실제 해보았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진행해 본 것뿐이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미숙하였던 것 같다”는 고백과 같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견충돌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미숙의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다.

나아가 일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적극적인 토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교수자가 중간에 개입을 하더라도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없이는 결코 독서토론이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독서토론은 팀별로 토론이 진행되다보니 “팀원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일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힘들었으며”, “상호간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과 같이, 토론을 이끌어 가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발언기회를 컨트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토론이 힘들었다는 응답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국 독서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도서목록, 토론동료(패널), 토론운영자(사회자)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아쉬움이 언급되었으며, 독서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독서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서토론 활동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다음 <표 15>를 살펴보면, 설문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지만, 특히 적절한 도서목록과 적당한 토론시간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5〉 독서토론 시 필요한 요소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토론방법 가이드	16	45.7	17	48.6	1	2.9	1	2.9	0	0.0
적절한 도서목록	23	65.7	7	20.0	5	14.3	0	0.0	0	0.0
체계적 활동지	16	45.7	11	31.4	8	22.9	0	0.0	0	0.0
적당한 토론시간	18	51.4	11	31.4	6	17.1	0	0.0	0	0.0

V. 결론

지금까지 D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해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비교과 교육의 한 방법으로, 독서토론활동이 활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방법과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D대학의 핵심역량 중 “글로벌역량”에 대한 주제로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독서토론의 방법 또한 설계하였다. 이후, 총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도서 및 독서토론방법을 안내하고 약 2달간 독서토론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독서토론활동의 효과에 대해 측정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활동 수행자를 대상으로 독서토론활동을 수행 전·후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서토론 후 상당 부분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

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글로컬의 용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친구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진진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 6개 중 “글로컬”이라는 하나의 역량에 집중하여 도서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주제 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비교과 교육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목록 및 토론활동을 위해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지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목록에 대한 불만과 토론의 운영방법, 토론동료와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진행된 독서토론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토론논제를 선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하브루타 형식의 독서토론모델을 제안하고 관련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하브루타 방식이 찬반토론을 주요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논제를 찾아내는 것에서 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즉, 일정한 형식을 정하게 되면 독서토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겠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논제 찾기의 어려움은 도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향후 도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토론의 방법이 계발되고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증명해 내었지만 독서토론의 단계별 문제와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향후 학생들이 독서토론을 위해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자황. 2007.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연구』 53권: 279-298.
- 김라연. 2007. “모듬 독서 활동에서의 인지적 독서 행동 변화 양상.” 『독서연구』 17권: 83-109.
- 김승환. 2004. “독서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독서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3호: 1-22.
- 김지일·장상필. 2014. “정주대학 교육과 대학생 생활 적응의 자기회귀 교차 지연 효과분석 연구.” 『교육종합연구』 12권 4호: 237-261.
- 김현우·강선영.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사례.”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2호: 337-357.
- 김혜영·이수정. 2013. “역량진단검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진단도구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권 4호: 139-172.
- 백상현. 2020.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 활동 경험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4권 1호: 259-282.
- 이승윤. 2015.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한 독서토론 지도 방안.” 『리터러시 연구』 13권: 11-36.
- 이영호. 2018. “학생 참여 중심 독서 토론 수업 사례 연구.” 『한국작문학회』 39권: 317-348.
- 이정미·이길재·강지연. 2019.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21호: 355-375.
- 임성관. 2019.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을 위한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권 2호: 261-283.
- 정운숙·윤희정·공성수. 2019. “대학생 핵심역량 기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교양교육연구』 13권 5호: 293-321.
- 최상민. 2016. “독서·토론 활동을 통한 대학생의 자기 성찰적 인성 개발.” 『한국리터러시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83-196.

- 최진영·신판석·박윤국·김도영·박종원·윤구영·김우년. 2011. “비교과과정 운영 사례 조사 및 운영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4권 4호: 69-77.
-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CESA.” <https://www.kcesa.re.kr/index.do>(검색일: 2021.2.13.)
- 한안나. 2017.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교육문제연구』 30권 4호: 111-138.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Vol. 1)*. CA: Jossey-Bass.
- Hezki, Arieli and Kim Jin-Ja. 2014. *Talmudic Havruta Learning*. Seoul: iMD Center.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 Pascarella, E., P. T. Terenzini, and K. A. Feldman.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Vol. 2)*. CA: JosseyBass.

Possibility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as one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case of D University

Youra Youn*·Eunju Lee**

ABSTRACT

Recently, university education has been aiming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so that students can successfully perform their duties in their career fields after graduation. In order to establish such a competency-based educ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that can develop various competencies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ading and debate activities as one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through the case of D University, an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is end, a book related to “glocal competency”, one of the six core competencies of D University, was selected, and the Habruta discussion method was adopted to design a reading discussion activity that D University students could perform as extracurricular programs.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reading discussion for 35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ading discussion for about two months, and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were summarized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reading discussion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statistically prove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erception and behavior after reading discuss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und the possibility of cultivating various competencies despite the selection of books by focusing on one of the six core competencies of D University.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guess the positive effect of the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as extracurricular programs. In the future, for more effective and smooth reading debate activities, not only various reading debate metho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 should be designed, but also appropriate guides will be needed.

Keywords : competency-based education, extracurricular programs, reading discussion activity, Reading, Habruta discussion method

투고일: 2021.02.14.

심사일: 2021.02.26.

게재확정일: 2021.03.11.

* Associate Professor, Donggeu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onggeui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3.6.1.133>

【연구논문】

Validation of a Floor Noise Annoyance Scale (FNAS) in a Community Sample

Na Young Shin*

ABSTRACT

Noise transmitted between floors in apartments is a major problem of neighborhood conflicts in Korea. While noise annoyance involves multi-components including emotional distress, perceived disturbances, physiological changes, and coping behaviors, one-item scales have been used to assess the level of noise annoyance. Floor Noise Annoyance Scale (FNAS) is a multi-item self-reported questionnaire developed in Korean language to evaluate neighbor noise annoyance from upper floors in residential buildings. For the practical use of FNAS, a validation study on the scale is needed.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NAS among apartment residents in Kore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results showed that the FNAS has a single factor structure, and the scale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mong Korean apartment residents. The FNAS scor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oise sensitivity, distress intolerance, neuroticism. This study provides support for the utility of the FNAS and shows that the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of assessing upper floor noise annoyance among apartment residents.

Keywords : Apartment noise, Floor Noise Annoyance Scale, Validity, Reliability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The author thanks Prof. Y. Lim, the developer of FNAS, for allowing me to validate the scale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scale.

I. Introduction

Noise is undesirable sound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ounds such as music can sometimes be perceived as noise depending on one's psychological st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Noise transmitted between floors in apartments is a major cause of neighborhood conflicts in Korea where 78.4% of homes are in multistory residential buildings(Statistics-Korea 2019). Noises from upper floors is often transmitted through solid structures such as floors, and thus the building structures are related to noise generation(Han 2017; Yoo and Jeon 2014). According to a survey of 3,040 Koreans living in multi-story residential buildings by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88% experienced annoyed noises from upper floors and 54% had conflicts with their neighbors due to floor impact noises(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3). Conflicts between neighbors due to noise transmitted through floor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sometimes lead to violent conflict, arson and even murder in Korea.

Neighbor noise generated between apartment units in Korea is attributed to building structures, thicknesses of floor concrete slaps and the traditional Ondol culture(Kim 2012). Korean Ondol culture, where the floor is heated and people live on the floor, may be a factor that causes more floor impact sound than the culture where shoes are worn indoors and carpet is used as the floor finishing material(Seo et al. 2016). The most annoying noises from upper floors are generated by floor impacts such as children jumping and by airborne sound such as televisions or singing(Jeon et al. 2010). Floor impact sound is generated from light weight impact sounds like dragging furniture and

heavy weight impact sounds like children's running footsteps(Han 2017). Sound made by children jumping and by the dropping of small items are the greatest sources of neighbor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Park et al. 2017). According to data collected from 2013 to 2014 by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80% of complaints about neighbor noise were due to noise from an upper floor and children jumping and adults' footsteps constituted 73% of noise sources(Cha 2014).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law on floor impact sound in 2014 as an effort to reduce the increasing neighborhood conflicts due to floor noises(Ministry of Land 2015). However, the number of cases complaining of floor noises is steadily increasing up to 2018, according to data from National Noise Information Center(NNIC, Statistics by year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searched> in 2021.2.12.). This trend supports the notion that floor noise annoyance is affected by personal factors such as noise sensitivity, emotional states, and coping capacity as well as physical factors such as building materials or slab thickness(Park 2016; Park et al. 2019). Indeed, recent studies indicated that slab thickness was not the sole factor predicting annoyance caused by floor impact sound, and noise sensitivity, house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s neighbors were associated with the responses to noise(Park et al. 2018; Park et al. 2019).

Noise annoyance is unpleasant evaluation to noise sources, which can cause individuals to become distracted, distress, irritated, frustrated, anxious, or angry. Accumulating evidence indicates sustained environmental noise such as traffic and aircraft noise, by acting as a sustained stressor, can cause health problem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Recio et al. 2016) and result in sleep disturbance(Ristovska et al. 2013) and anxiety(Persson et al. 2007). For

neighbor noise, noise annoyance has negative effects on emotion and health(Maschke et al. 2007). Prior studies showed that noise annoyance due to footsteps from the upper floor induced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dislike, irritation, and pain in Koreans(Park et al. 2018) and annoyance caused by floor impacts has been reported to increase electrodermal activity and respiration rate(Park et al. 2017). People annoyed by floor impact noise exhibited disturbed sleep, rest and concentration and complained of tiredness and headaches(Park et al. 2015; Park et al. 2016; Park 2019).

Noise annoyance is associated with multiple responses including emotional distress, perceived disturbances, physiological changes, and coping behaviors. Fidell et al.(1988) argued that nonacoustic factors are related to noise annoyance and research on this issue is needed. Guski et al.(1999) proposed that noise annoyance involves several components including emotion, experience of disturbance bothering daily activities, attitude, knowledge about noise sound effect, or personal decision. Stallen(1999) viewed noise as stress and propos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noise annoyance based on Lazarus' stress model(1966). Lazarus(1966) argued that emotional states induced by stress depend on the individual's cognitive appraisal of stress. Based on Lazarus' theory, Stallen(1999) proposed that noise annoyance is determined by the perceived disturbance,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capacity for noise. Indeed, previous evidence indicated that annoying noises from the upper floors was associated with perceived disturbance and coping behaviors, such as going outside, making official complaints and considering a home move(Park et al. 2015; Park et al. 2016).

Noise annoyance has been frequently assessed using one-item standardized five or eleven-point scales to assess level of noise

annoyance (Fields et al. 2001). This type of scale enables the amount of annoyance to be measured but is limited in terms of ability to assess various responses associated with noise annoyance, such as emotional, coping, and health-related responses. For this reason, Schreckenber et al. (2018) recently developed the Multi-Item Annoyance Scale (MIAS) to evaluate noise annoyance from transportation including aircraft, railway, and road traffic. This questionnaire comprises of several items involving disturbances to daily activities such as using phone at home, watching TV, and concentrating and perceived coping responses such as closing the windows, feeling at the mercy of the noise, and mentally switching off. Given that floor impact noise is primarily generated by upstairs neighbors and associated with social relational aspect, responses to annoying noise induced by neighbors probably differs from responses to other types of environmental noises such as road, railroad, or aircraft noise. Because the sources of noise are rather specific to persons living on the upper floors, copying responses to floor noise may be related to copying behaviors in social conflict situations. In a study of Bang et al. (2015), about 39% of the participants chose to interact directly with upstairs neighbors who caused noises, 40% requested arbitration or responded legally, and 7% gave up or took retaliatory a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of floor noise annoyance, Floor Noise Annoyance Scale (FNAS), a multi-item questionnaire, has been developed to evaluate annoyance caused by noises from upper floor in residential buildings (Wee et al. 2017). This scale is composed of 10 items that evaluate emotional responses, perceived disturbances, and coping responses to annoying noises generated by the upper floors. However, FNAS has not yet been validated, and a validation study is needed for the practical use of the

scale in Korea where floor noise is one of the social problems.

According to the common scale validation procedure(Slavec & Drnovsek 2012), the author took three steps towards validation: dimensionality assessment, validity assessment. and reliability assessment. Dimensionality is defined as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required to account for the correlations between items, which can be assess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EFA is usually performed in the early stages of scale development. When performing EFA, researchers assume that their hypotheses on the dimensions of measurement are limited. Validity is the extent to which a scale truly measures what it is expected to measur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re key subtypes of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an instrument is correlated with alternative scales with the same construct. Discriminant validity is the extent to which a scale does not correlate highly with conceptually different constructs. Reliability is the degree to which a scale yields consistent results and is assessed with internal consistency and temporal stability. The most commonly used reliability measures are the Cronbach's alpha and test-retest reliability.

The current study evalu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veloped scale FNAS and its factor structure,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in Koreans living in apartments. FNAS was expected to be unidimensional, in which all 10 items would load on a single facto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ould be established when similar scales(e.g. noise sensitivity scale) would be more highly correlated than dissimilar scales(e.g. neuroticism scale), and positive correlations would be found between FNAS and other related constructs(neuroticism, distress intolerance,

and noise sensitivity).

II. Methods

1. Participants

Two hundred and eighty-two residents of apartm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lived in Busan, Daegu, and Gyeongsang-do province in South Korea. Residents were between 19 and 69 years of age(mean age \pm SD, 41.30 ± 11.40) and 59.6% were female.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The mean hours at home during the day was $11.87(SD=3.16)$ and mean years elapsed since the completion of building was $13.24(SD=8.35)$.

These 282 participants were used to analyze the factor structure of FNAS. Among them, 103 participants completed FNAS and other scales and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of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The other 179 completed FNAS alone. These 103 people were between 25 and 69 years old(mean age \pm SD, 42.86 ± 9.21) and 68.9% were women. They spent a mean 11.97 hours($SD = 3.88$) at home during the day and for these participants mean years elapsed since the completion of building was $15.05(SD = 8.84)$.

2. Measurements

1) The Floor Noise Annoyance Scale(FNAS)

FNAS was originally developed by psychologists familiar with noise annoyance in the Korean language through a systematic procedure.

Briefly, 30 items were initially created based on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on floor noises, following recommendation of De Vellis(2003). The contents of items were also based on the most frequently appealed reactions to noise from upstairs neighbors. Ten items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relevance, clarity, and similarity with other items. The items reflect the discomfort experienced by upper floor noise annoyance and evaluate perceived disturbances in daily activities, emotion, coping capacity and behaviors. Some items were includ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pper floor noise annoyance and its social relational aspects. For example, one item reads, “I want to protest when I can hear noise from the upper floor apartment.” This type of coping response to noise source has rarely been observed for other types of noise, like traffic noise. This item reflects statistical survey data in Korea that upper floor noise victims tend to complain directly to residents living in upper apartments or lodge complaints in management offices. The scale was designed for adults aged 16 and above and to have a single factor structure. FNAS is based on a six-point Likert method ranging from 'strongly disagree'(coded as 1) to 'strongly agree'(coded as 6).

2)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IPIP)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IPIP) was developed by Goldberg(1999) to measure each factor in a five-factor model(i.e.,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and Openness to Experienc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respond to each of the 50 items using a five-point scale, ranging from 1(very inaccurate) to 5(very accurate). I used the neuroticism factor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PIP(Yoo et al. 2004).

3) The Distress Intolerance Index(DII)

The Distress Intolerance Index(DII) was developed by McHugh and Otto(2012) to measure perceived inability to fully experience unpleasant, aversive or uncomfortable emotions.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respond to each of the 10 items using a five-point scale, ranging from 0(strongly disagree) to 4(strongly agree). In the present study, the Korean version of the DII was use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has been reported to be .87(Seo et al. 2014).

4) Weinstein's noise sensitivity scale(WNS)

The Weinstein's noise sensitivity scale(WNS) was developed by Weinstein(1978) to measure attitude toward general noise and emotional response to various environmental sound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respond to each of the 21 items using a six-point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6(strongly agree). In the present study, the Korean version of the WNS was used, which has a reported internal consistency of .87(Oh et al. 2008).

3. Procedure

Permission was obtained from the developer of FNAS(Y. Lim). Participants in the present study completed a battery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It took about 20 minutes to complete the FNAS, the IPIP, the DII, and the WNS. A researcher was available to answer questions.

4.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1.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using the Principal Axis Factoring extraction method was used to reveal the factorial structure of FNAS. Several criteria were used to determine the number of factors: (1) Kaiser's(1961) criterion(i.e. if eigenvalues are ≥ 1) (2) parallel analysis(Horn 1965), and (3) the Scree test(Cattell 196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r) were used to assess relationships between FNAS and other scales. Cronbach's alpha and item-total correlation were used to measur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FNAS. According to Nunnally et al.(1994), a scale is acceptable if it has an alpha value of $>.70$ and a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of $>.30$.

III. Results

1. Preliminary Analysis

Prior to the main analysis,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NAS and gender, age, hours at home, and building age. Previous results showed that noise annoyance correlated with age or gender(Beheshti et al. 2019; Michaud et al. 2005). Also, previous studies on floor noise suggested that hours at home and building age could influence on floor noise annoyance(Park et al. 2013; Paunović et al. 2009). According to t test result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FNAS scores was observed($t = 1.00, p = .31$).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the FNAS

scores were not correlated with age($r = .03$, $p = .52$), hours at home($r = -.07$, $p = .18$), or building age($r = -.02$, $p = .66$).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scale was carried out using EFA. Both the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 .934) and Bartlett test of sphericity [2245.896 (df=45), $p < .001$] showed the appropriateness for conducting the EFA. Only one factor had an eigenvalue > 1.0 (6.623). Also, according to parallel analysis results, only one factor should be extracted. Cattell's scree test yielded a unifactorial solution as the best choice. As can be seen in Table 1, the single-factor structure of FNAS-items revealed that all 10 items had a loading of $\geq .60$, explaining 66.2% of the total variance of the construct.

<Table 1> FNAS-item loadings for the single-factor solution¹⁾

Item	Factor loading	Communality
7. Because of the apartment upper floor noise, my mind is not always stable.	.861	.741
9. When I can hear the apartment upper floor noise, I get angry and cannot bear it.	.847	.717
3. I want to protest when I can hear apartment upper floor noise.	.814	.662
8. I hate to be home because of the apartment upper floor noise.	.814	.662
2. Because of apartment upper floor noise, everyday life is greatly disturbed.	.813	.660

1) Each item is originally in Korean but translated by the author in English.

4. My sleep is disturbed by apartment upper floor noise.	.804	.646
6. I am always anxious to hear the apartment upper floor noise again.	.786	.617
10. It is almost impossible for me to withstand apartment upper floor noise.	.763	.582
1. When the apartment upper floor noise is heard, it is very painful.	.728	.529
5. I want to move to an apartment where there is no apartment upper floor noise.	.661	.436
Eigenvalue	6.623	
% Variance	66.23	

3.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Because all measures were normally distributed(e.g., for FNAS, skewness = .699 and kurtosis = .258, for IPIP-Neuroticism, skewness = .238 and kurtosis = .509, for the DII, skewness = .195 and kurtosis = -.727, for the WNS, skewness = -.025 and kurtosis = -.108),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nature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FNAS and other variables(the IPIP-Neuroticism, the DII, and the WNS)(Table 2).

Table 2 presents correlations between FNAS scores, and IPIP-Neuroticism, the DII, and the WNS. FNAS total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easures of neuroticism, distress intolerance, and noise sensitivity(range=.19 to .51). Consistent with theoretical expectations, the FNAS was found to b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noise sensitivity(WNS) than the other variables(the IPIP-Neuroticism: $Z=4.492$, $p<.001$ and the DII: $Z=3.107$, $p<.01$)(Steiger 1980).

〈Table 2〉 Zero-correlations among the study measures(N=103)

	FNAS	IPIP-Neuroticism	DII	WNS
FNAS	-			
IPIP-Neuroticism	.19*	-		
DII	.30**	.58***	-	
WNS	.51***	.10	.15	-

Note. FNAS, The Floor Noise Annoyance Scale; IPIP-Neuroticism,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Neuroticism; DII, The Distress Intolerance Index; WNS, Weinstein's Noise Sensitivity Scale. *** $p < .001$, ** $p < .01$, * $p < .05$

4. Reliability and item-level analyses

Internal consistency tests showed that the Cronbach's alpha of the FNAS was .941,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70 regarded as an acceptable indicator of internal consistency. Item-total correlations ranged from .64 to .83 for FNAS (Table 3). According to the criterion $\geq .30$ (Nunnally et al. 1994), all 10 items were judged acceptable. Test-retest reliability tests performed at 2-week intervals provided a coefficient of .877 for FNAS.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of each FNAS item with the sum of the other items and internal consistency if the item is deleted

Items	Mean	S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3.57	1.10	.70	.93
2.	3.03	1.12	.78	.93
3.	3.21	1.21	.79	.93
4.	3.01	1.19	.78	.93
5.	3.54	1.38	.64	.94
6.	2.82	1.23	.75	.93
7.	2.66	1.14	.83	.93
8.	2.45	1.11	.78	.93
9.	2.63	1.15	.81	.93
10.	2.47	1.11	.73	.93

IV. Discussion

Neighborhood conflicts due to noises from upper floors is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cale to evaluate the level of annoyance caused by floor noise. Existing scales evaluate noise annoyance with a single item or are specific to noise annoyance generated from transportation. Those scales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noyance due to noise generated by persons living in the nearby neighborhood of the same buildings.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its factorial structure,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floor annoyance scale, FNAS,

among apartment residents in Korea. In my study, the scale was found to consist of one factor as was intended by the developer, and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hen applied to Korean apartment residents.

FNAS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euroticism, distress intolerance, and noise sensitivity, though it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noise sensitivity than neuroticism or distress intoler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nnoyance experienced by upper floor noise is affected by neuroticism, distress intolerance, and noise sensitivity and that noise sensitivity is the most proximal variable of floor noise annoyance among three of variables. Noise sensitivity is an internal trait that can affect one's emotions and behaviors caused by noise, regardless of the noise intensity (Job 1999). Given the results of strong correlation between noise sensitivity and floor noise annoyance in the present study, floor noise annoyance is expected to affect one's emotion and coping responses to noise regardless of the floor impact level. Because people with high noise sensitivity tend to perceive noise as an uncontrollable stimulus (Hatfield et al. 2002), people with high level of floor noise annoyance a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floor impact noise from the upper floors as uncontrollable stressor.

FNAS was found to have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I suggest this valid scale could be used in various mental health settings associated with disturbance due to upper floor noise and by government agencies with responsibility for issues arising from upper floor noise. FNAS, which measures noise annoyance on a basis of multiple responses, allows to measure the perceived discomfort more objectivel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ould use FNAS to assess the degree of discomfort

caused by upper floor noise and government agencies could use the scale to identify those suffering from upper floor noise. In addition, by proving data on level of discomfort caused by upper floor noise, FNAS could provide important hints to those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related to upper floor noise problems. Furthermore, compared to other types of environmental noise sources, floor noise annoyance has more social features, which was reflected in some of the items of FNAS. FNAS allows researchers to study whether noise annoyance due to the floor impact sound would be different from noise annoyance of other environmental noises such as road traffic in the perceived disturbances, emotional intensity, and coping behavior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 used only self-reported data to measure upper floor noise annoyanc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floor noise annoyance and other variables was exaggerated by the common method variance. I propose more objective data be included in future studies. Second, no physical noise measurem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 the inclusion of such information may lead to different results. Third,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specific regions in Korea, and thus, care should be taken when applying these results in general community population. Finally, this study was not performed on persons that had requested something be done to reduce upper floor noise. The biggest problem of upper floor noise in Korea is that it leads to neighbor conflict. I suggest that studies be conducted on those who have requested action be taken to reduce upper floor noise.

This study provides preliminary support for the use of the FNAS and shows that the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of assessing upper floor noise annoyance among apartment residents. All items of the FNAS

were loaded on a single factor, and this result supports Stallen's theory(1999), which proposed that perceived disturbance,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capacity are primary determinants of noise annoyance. This scale has the benefit of providing objective measure of annoyance severity by evaluating the multiple components of noise annoyance components. The FNAS can be used to develop differential intervention strategies to mediate neighborhood conflic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noise annoyance. Additional studies are required to confirm these findings in those who request action be taken to reduce upper floor noise,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FNAS using physical noise measurem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upper floor noise annoyance in relation to variables associated with upper floor noise.

References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3. *Floor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online survey data.
- Bank, K-S and J-H Lee. 2015. "Victim's behavior on floor noise of apartment." *Residential Environment* 13(2): 253-270.
- Beheshti, Mohammad Hossein, Ebrahim Taban, Seyed Ehsan Samaei, Mohammad Faridan, Farahnaz Khajehnasiri, Leila Tajik Khaveh, Maryam Borhani Jebeli, Ahmad Mehri, and Ali. Tajpoor. 201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gender on noise annoyance in laboratory stud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8: 95-100.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245-276.
- Cha, S. 2014. "The management system and effect of floor noise at apartment house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693-697.
- De Vellis, R. 2003.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CA: SAGE.
- Fidell, S., D. M. Green, T. J. Schulz, and K. S. Pearsons. 1988. *A Strategy for Understanding Noise-Induced Annoyance*. Report HSD-TR-87-013. Canoga Park, CA, USA: BBN Laboratories Incorporated.
- Fields, J. M., R. G. De Jong, T. Gjestland, I. H. Flindell, R. F. S. Job, S. Kurra, P. Lercher, M. Vallet, T. Yano, Reseach Team at Ruhr University, R. Guski, U. Felscher-Suhr, R. Schumer. 2001. "Standardized general-purpose noise reaction questions for

- community noise surveys: research and a recommenda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42(4): 641-679.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edited by I. Mervielde, I. Deary, F. D. Fruyt, and F. Ostendorf, 7-28. Tilburg,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Guski, R., U. Felscher-Suhr, and R. Schuemer. 1999. “The concept of noise annoyance: How international experts see it.”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23(4): 513-527.
- Guski, R., D. Schreckenber, and R. Schuemer. 2017.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A systematic review on environmental noise and annoy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12): 1539.
- Han, K. J. 2017.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floor noise in apartment housing.”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3; 87-110.
- Hatfield, J., R. S. Job, A. J. Hede, N. L. Carter, P. Pelpoe, R. Taylor, and S. Morrell. 2002. “Human response to environmental noise: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9(4): 341-359.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185.
- Jeon, J. Y., J. K. Ryu, and P. J. Lee. 2010. “A quantification model of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indoor noise environment in residential buildings.” *Applied Acoustics* 71(10): 914-921.
- Job, R. F. 1999. “Noise sensitivity as a factor influencing human reaction to noise.” *Noise and Health* 3: 57-68.

- Kaiser, H. F. 1961. "A note on Guttman's lower bound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14(1): 1-2.
- Kim, S-W.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loor impact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in wall slab type apartment."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2(1): 73-81.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London: McGraw-Hill.
- Maschke, C., and H. Niemann. 2007. "Health effects of annoyance induced by neighbour noise." *Noise Control Engineering Journal* 55(3): 348-356.
- McHugh, R. K., and Otto, M. W. 2012. "Refining the measurement of distress intolerance." *Behavior Therapy* 43(3): 641-651.
- Michaud, D. S., S. E. Keith, and D. McMurchy. 2005. "Noise annoyance in Canada." *Noise and Health* 7(27): 39-47.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Standard floor finishing and structures for interlayer noise prevention*, 319. Governing Cit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London: McGraw-Hill.
- Oh, W-K., H-S. Kim, S-H. Chang, K-S. Lee, K-W. Kim, H-J. Choi, E-M. Ham, and J-H. Son. 2008. "Effect of aircraft noise of the air force on noise sensitivity, psychosocial status and behaviour of elementar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R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3): 279-291.
- Park, S. H. 2019.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floor impact noise."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Liverpool.

- Park, S. H., and P. J. Lee. 2015. "A qualitative study of annoyance caused by floor impact sounds in apartment buildings." *Age* 20(1): 30s.
- Park, S. H., P. J. Lee, and B. K. Lee. 2017. "Levels and sources of neighbour noise in heavyweight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Applied Acoustics* 120(Supplement C): 148-157.
- Park, S. H., P. J. Lee, and J. H. Jeong. 2018. "Emotions evoked by exposure to footstep noise in residential buildings." *PloS One* 13(8): e0202058.
- Park, S. H., P. J. Lee, K. S. Yang, and K. W. Kim. 2016. "Relationships between non-acoustic factors and subjective reactions to floor impact noise in apartment building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9(3): 1158-1167.
- Park, Y., K. Kang, Y. Cho, and K. Kim. 2013. "A basic study on apartment floor noise managem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3: 587-653.
- Paunović, K., B. Jakovljević, and G. Belojević. 2009. "Predictors of noise annoyance in noisy and quiet urban street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407(12): 3707-3711.
- Persson, R., J. Björk, J. Ardö, M. Albin, and K. Jakobsson. 2007. "Trait anxiety and modeled exposure as determinants of self-reported annoyance to sound, air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home."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1(2): 179-191.
- Recio, A., C. Linares, J. R. Banegas, and J. Díaz. 2016. "Road traffic noise effects on cardiovascular, respiratory, and metabolic health: An integrative model of biological mechanisms." *Environmental Research* 146: 359-370.

- Ristovska, G., and J. Lekaviciute. 2013. "Environmental noise and sleep disturbance: research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and newly independent states." *Noise and Health* 15(62): 6-11.
- Schreckenber, D., C. Belke, J. Spilski. 2018.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item annoyance scale (MIAS) for transportation noise annoy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5): 971.
- Seo, J-C., and J-G. Kim. 2016. "공동주택현황과 층간소음문제" *Rubber Technology* 17(1): 34-50.
- Seo, J-W., and S-M. Kwon.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Distress Intolerance Index in a Korean college samp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783-801.
- Slavec, A., and M. Drnovšek. 2012. "A perspective on scale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14(1): 39-62.
- Statistics-Korea. 2019.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1&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I2 (Accessed February 11, 2021).
- Steiger, J. H. 1980. "Tests for comparing elements of a correlation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87: 245-251.
- Stallen, P. J. M. 1999.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noise annoyance." *Noise and Health* 1(3): 69-79.
- Weinstein, N. D. 1978.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ons to noise: a longitudinal study in a college dormit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458-466.

- Yoo, S. Y., and J. Y. Jeon. 2014.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interlayers on floor impact sound insulation in box-fram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Building and Environment* 76: 105-112.
- Yoo, T.-Y., L. Lee, and M. C. Ashton.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3): 61-75.
- Wee, C., and Y. Lim. 2017. "A validation study of Floor Noise Annoyance Scale (FNAS)." Presented at the poster session in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in 2017.

층간소음불편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상도 지역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신나영*

논문요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주요 거주형태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은 이웃간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소음불편감은 정서적 고통, 지각된 불편, 생리적 변화, 대처행동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대개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평가되어왔다. 층간소음불편감 척도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감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척도로,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민 28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불편감 척도를 실시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이 발견되었으며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불편감 척도의 총점은 소음 민감도와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고, 고통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신경증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층간소음불편감 척도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아파트 소음, 층간소음불편감 척도, 타당도, 신뢰도

투고일: 2021.02.14.

심사일: 2021.02.26.

계재확정일: 2021.03.10.

* 경기대학교 조교수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3.6.1.157>**【연구경향】**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 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점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김진웅*

논문요약

이 연구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살피고 기존의 언어자료와 차별화되는 언어 데이터 개발을 통해 데이터 편향성을 완화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비롯된 윤리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가 사용자들과 대화하면서 학습한 인종차별적 언행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이나 MIT 연구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노먼(Norman)이 드러낸 싸이코패스 성향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윤리적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인공지능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성, 인종, 지역을 포함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부터 인공지능의 결함이 시작된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구축하는 음성 데이터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에서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유발화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지역별 연령별 화자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배제에 기인한 편향성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 방언, 자연언어처리, 윤리학, 편향성, 배제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 서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윤리학이다. 첨단的人工智能 시대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비롯된 학문이 재조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성희롱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¹⁾’는 사용자들과 대화하면서 학습한 인종차별적 언행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또한 MIT 연구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노먼(Norman)²⁾’이 드러낸 사이코패스 성향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적 성취만으로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이 서비스 개발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까? 당연히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겠으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는 대부분 성, 인종, 지역을 포함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채용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던 AI는 여성 지원자들을 배제시키는 성향을 드러냈고, 미국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한 인공지능 ‘COMPAS’는 흑인의 재범률을 실제보다 높게, 백인의 재범률을 실제보다 낮게 예측하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언어의 지역적 편향성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윈터라이트 랩(Winterlight Labs)이라는 캐나다의 스타트업에서 청각적 신호로부터 알

1)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서 2016년에 제공했던 트위터 기반의 챗봇 서비스이다. 서비스 개시 후 16시간 만에 혐오와 인종차별과 같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문제가 된 트윗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와 히틀러에 대한 찬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ina, 2016). 이와 같은 사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7년에 ‘AI 디자인 원칙’과 ‘AI 윤리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며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2) 2018년에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인공지능이다. 의도적으로 죽음 등 어두운 내용의 게시물을 통해 훈련을 받은 결과, 심리 테스트용으로 제시된 그림을 보며 일관되게 시체, 피 등을 연상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AI 개발에 알고리즘 자체보다 학습용 데이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³⁾. 그 성능은 매우 획기적이어서 음성을 듣고 90% 가까운 정확도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점이라면 데이터를 온타리오 지역에서 수집한 까닭에 온타리오 방언 사용자들만 정확히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보면, 향후에 개발될 의료 관련 인공지능 기술의 정확도가 방언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에 일부 방언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의 의학 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살피고 기존의 언어자료와 차별화되는 언어 데이터 개발을 통해 데이터 편향성을 완화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자연언어처리와 윤리학

1.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대두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했다⁴⁾. 과거에 NLP 분야에서 윤리적 고려가 등한시되었던 이유는 연구 대상이 인간이 아닌 텍스트였기 때문이다⁵⁾.

3) 이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Balagopalan et al.(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4) Leidner and Plachouras(2017, 31)에 의하면, 자연언어처리(NLP)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전통적인 윤리학을 NLP에 적용하는 응용 윤리학 연구이다. 윤리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아리스토텔레스, 밀, 칸트의 논의를 NLP 윤리학에 적용시키는 방식이다. 둘째,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함의들에 관한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논의는 주로 개인정보, 편향성, 차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육에 관련된 직업윤리의 문제를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5) 전통적으로 연구 윤리의 문제는 인간을 피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를 상정한다. 의학, 생명공학, 사회과학 등 인간이 피실험자로 참여했을 경우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위한 절차는 세 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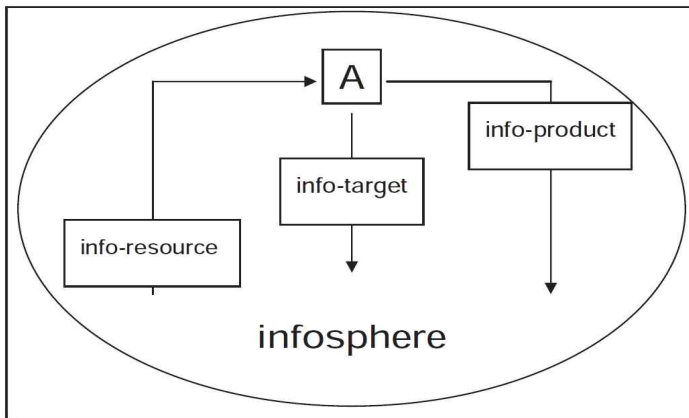
NLP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텍스트는 작가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작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를 특정하기 힘들며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문 기사이거나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어서 작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소설 등의 텍스트들이 주로 활용이 되었다(Hovy and Spruit 2016). 이처럼 작가와 텍스트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NLP 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영향을 따지는 윤리적 고려는 등한시되었다. 과거의 NLP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가 등한시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NLP 연구의 영향력이 실험실 내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텍스트에 언어학적으로 주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일반인들이 NLP 연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자연언어처리에 관한 연구는 IRB의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관행이 굳어진 원인은 자연언어의 연구 대상인 데이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는 미미하다고 간주한 데에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이래에 상황은 매우 급변하였다.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빅데이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자. 빅데이터 안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의 특성, 행위, 상호작용 등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빅데이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에 흩어져 있거나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분석되던 데이터를 통합하고 재분석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회적, 경제적 경향을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인간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빅데이터에 의해 인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SMS(Social Media Service) 데이터를 활용한 NLP 연구가 증가하면서 텍스트의 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SMS의 사용자들은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실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들: Floridi 모델을 중심으로

Floridi가 자연언어처리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윤리적 주체(ethical agent)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제안한 이후에 정보윤리학(Information Ethics)⁶⁾은 큰 진전을 이뤄냈다. Floridi는 정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내재적인 윤리적 가치(ethical value)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자연언어처리의 과정에서 윤리적 주체의 행위를 정보 자원(information resource), 정보 생산(information product), 정보 대상(information target)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윤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정보권역(Infosphere) 내에서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거하여 판단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NLP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접근이 각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그친 데에 비해 메타윤리적인 접근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윤리학이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존재론에 기반을 둔 설명을 시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래 [그림 1]은 Floridi(2006)의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RPT 모델(Floridi, 2006)



6) Froehlich(2004)의 논의에 의하면, '정보윤리학(information ethics)'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Koenig et al.(1981)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Floridi(2006)는 기존의 윤리적 논의들이 정보 자원에 대한 윤리학, 정보 생산에 대한 윤리학, 정보 환경에 대한 윤리학 등으로 세분되어서 논의되었던 점을 비판하며, 자연언어처리 전반에 걸친 윤리적 논의를 총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자원(Resource), 생산(Product), 대상(Target)의 머리글자를 따서 자신의 모델을 RPT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1]에서 윤리적 주체는 자신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의 행동을 할 것이라 가정한다. 윤리적 주체의 가치 판단이나 행위는 모종의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윤리적 주체는 다른 정보(Product)를 생성해 내기 위해 기존의 정보(Resource)를 활용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보 환경(Target)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의 특징은 정보의 생산, 자원, 그리고 정보의 생산 과정의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한 데에 있다⁷⁾.

먼저 '자원으로서의 정보 차원(R)'에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Floridi(2006)의 관점에 의하면 윤리적 주체가 보다 많은 양의 질이 좋은 정보를 얻는다면 좀 더 정확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많을수록 좋다'라는 입장은 윤리적 측면에서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밟고 정보 제공자에게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은 양과 질이 훌륭한 정보라는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우선시된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 아래에서는 윤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에 대해 자발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윤리적인 목표란 익명성의 보장, 정보의 공정한 이용, 편향성 배제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으로서의 정보를 대하는 윤리적 태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려 하기보다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Fort et al.(2011)에서는 MTurk를 활용한 정보 자원 수집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MTurk는 'Mechanical Turk'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의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소싱 시스템이다⁸⁾. MTurk는 두 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이 된다. 우선 청구인(requesters)은

7) 아래에서 제시하는 RPT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주로 Floridi(2006)를 바탕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8) 이 시스템은 온라인 마켓으로 널리 알려진 아마존에 의해 개발이 되었으며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HITs(Human Intelligence Tasks)’라고 불리는 작업을 생성시킨다. 청구인이 유의할 점은 ‘어떤 방식으로 복잡한 작업을 단순하게 분할할 것인가와 어떤 방식으로 사례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매우 적은 금액(한 문장의 외국어를 번역하는 데에 미화 5센트를 지급하는 식)이다. 우선 시간당 2 달러 미만에 그치는 저임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나⁹⁾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터커(Turker, 작업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있다. 터커들은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집단 교섭권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한 처지이다. 윤리적 주체의 입장에서 MTurk는 동일한 비용으로 다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시스템임이 분명하나 정보를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착취라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거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소싱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는 정보 자원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보 환경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RPT 모델에서 ‘생산으로서의 정보 차원(P)’에서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Floridi(2006)의 모델에서 윤리적 주체는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윤리적 주체는 정보 환경의 제한과 절차 내에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즉 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적절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자원을 생산한 가장 고전적인 예는 UNIX의 철자교정기(Spell)에서 찾아볼 수 있다(Leidner and Plachouras 2017). 1978년에 개발된 철자교정기 버전에서는 내재된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은 단어는 이메일에 의해 개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사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었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철자교정기 사용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Bentley 1986). 최근에 정보 생산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는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MS)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례는 챗봇을 활용한 가짜 팔로워의 양산이다.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팔로워 숫자는 계정 사용자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된다. 특정한 계정에 챗봇

9)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동일한 작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십분의 일 정도까지도 증일 수 있다고 한다.

을 활용하여 가짜 팔로워를 늘리면 계정의 신뢰성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진짜 팔로워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SMS에서 정상적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높인다. Thieltes et al.(2016)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생산이 현실 정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에서는 챗봇을 활용하여 극우적인 주장이 트위터에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으로서 정보 차원(T)'에 대해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정보 주체의 행위가 개인 정보의 침해, 해킹, 보안,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정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분석이 이와 관련을 맺는다. Floridi(2006)에서는 해킹을 정보 자원의 윤리적 문제로 오분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해킹을 정보 자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정보에 접근을 했을 뿐,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해커들의 변명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해킹에 대해 윤리적으로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해킹에서 핵심적인 논제는 승인 없이 접근한 정보를 가지고 윤리적 주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니다. 승인 없이 접근한 정보가 정보 환경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Leidner and Plachouras(2017)는 자동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런던식 발음을 사용하는 젊은 남성 금융종사자에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대화 시스템이 스코트랜드식 발음을 사용하는 노년의 여성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 보자(물론 저자들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제시한 예이다). 아마도 스코트랜드식 발음을 사용하는 노년의 여성들은 대화 시스템의 샘플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 다른 대안은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정보 시스템이라는 정보 환경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 셈이며 이는 정보의 편향성(bias)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대화 시스템의 구문 분석기 개발자나 구문 분석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의 한계를 정확히 사용자들에게 전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III.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점과 시사점

1. 데이터 편향성의 유형과 성격

Friedman and Nissenbaum(1996, 332)의 정의에 의하면, 편향성은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체계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들은 원인에 따라 편향성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첫째, 편향성은 사회 기관, 사회적 관습, 사회적 태도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를 기존 편향성(pre-existing biases)이라고 부른다. 둘째,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시스템이 사회적 맥락에서 편향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기술적 편향성(technical biases)이라 부르며, 그 원인으로 기술적 제약과 결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우발적 편향성(emergent biases)¹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맥락 아래에서 디자인된 시스템이 다른 맥락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할 때를 가리킨다.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NLP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을 Hovy and Spruit(2016)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자.

1.1. 데이터 상의 배제

언어 자체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인구 통계학적 편향성(demographic biases)을 드러낸다. 이러한 편향성은 잠재적인 특성을 띠며 데이터에 상존하며 머신러닝에서 발생하는 과적합(overfitting)¹¹⁾의 원인이 되곤 한다. 자연언어처리 모델은 암묵적으로 모든 언어들에 학습 데이터와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업을 수행한다. 당연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편향된

10)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우발적 편향성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기존에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각이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11) 과적합(overfitting)은 학습데이터에 정확히 적용이 되는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적용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 경우에 그 구성이 상이한 데이터에 대하여 기능이 저하되거나 작동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인구통계학적 편향성의 잠재적 결과로 배제 또는 대표성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제나 대표성의 결여 자체가 과학적 연구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결과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음성 인식 시스템이다. 남녀의 차이에 따른 음성 인식 비율의 차이는 남성 화자의 인식률이 높았다는 결과(Ali et al. 2007)와 여성 화자의 인식률이 더 높았다(Goldwater et al. 2010)는 결과가 각각 존재한다. 남녀 차이 이외에 방언에 기인한 편향성 역시 보고된 바 있다. 영어의 예(Wheatley and Picone 1991)와 아랍어의 예(Droua-Hamdani et al., 2012)는 학술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들인 반면에 한국어의 예는 자연언어시스템의 작동 오류에 대한 일화들¹²⁾이 전해지는 수준이다.

1.2. 데이터의 과일반화

배제가 데이터에서 비롯된 시스템의 결점이라면,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문제는 모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NLP에서 사용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기술은 이미 다양하게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유튜브나 아마존 등에서 제공하는 추천작은 NLP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이고¹³⁾ 온라인 사기 방지(fraud detection)를 위한 다양한 기술 역시 사용자 특성으로부터 추론한 결과를 적용한다. SMS 사용자의 연령, 성, 인종 등을 예상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특성을 추론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Mohammady and

12) 중앙일보 2017년 10월 18일자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LG 에어컨의 대화 시스템의 시연 중에 조성진 부회장의 “니 머꼬?”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방언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홍보 기사이다.

13)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을 추천 엔진(recommendation engine)이라고 부른다. 현재 많은 IT 기업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추천 엔진은 특정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상하는 학습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정보 분석 시스템이다. 현재 온라인 마켓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찾아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추천 엔진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 만한 품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은 아마존,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ulotta(2014)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특성을 예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태깅된 트위터 사용자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내용,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학습한 모델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사회 연결망을 분석하여 트위터 사용자들의 연령, 성별, 인종 등을 예상하고 분류한다.

1.3. 연구 주제와 데이터의 노출(exposure)

앞서 언급한 데이터 상의 배제와 데이터의 과일반화는 NLP 시스템 알고리즘 차원의 문제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에 관한 문제는 학계 전반의 경향성과 관련이 깊고 연구 설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문제이다. 학계의 주목도와 동향에 따라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거나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폭력이나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특성을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에 연계시키는 일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언어의 처리가 어렵다는 결과가 반복이 된다면 이러한 집단의 연구는 어렵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결국은 연구의 결과가 편향성의 확대와 최종적으로는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NLP에서 인도유럽어 계통의 데이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다른 어족의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불균형성은 특히 라벨링이 된 데이터(labeled data)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라벨링이 이루어진 데이터는 몇몇 언어에 한정되어 있다. Hovy and Spruit(2016)에 의하면 2013년에 수집된 트위터의 데이터 가운데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31개 중에 11개는 트리뱅크 분석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트리뱅크와 같은 구문 분석의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 분석의 결과는 더욱 적었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점보다 더욱 NLP 연구의 편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NLP 개발도구가 영어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 중심의 언어 도구 개발이 언어유형론적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형론적으로 구분이 되는 언어에 영어의 형태론이나 통사론을 적용한 분석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NLP 개발 현장의 현실이다.

2. 데이터 편향성의 해결 방안

NLP 시스템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는 특정한 패턴에 대한 학습으로 귀결된다¹⁴⁾.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서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와 가까운 곳에 ‘의사’가 나타나는 패턴이, 또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와 가까운 곳에 ‘간호사’가 나타나는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앞서서 제시한 ‘기존 편향성’에 해당이 된다. 즉 사회적 관습이 데이터의 편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같은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남성을 의사로, 여성을 간호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희귀하다. 특히 소수자들은 정보 환경에서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이 생성한 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 안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로는 IT 개발자들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상업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종적인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이나 방언 사용자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이 된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정보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으며 방언 사용자들의 언어는 대부분 구어로서 생산되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수집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NLP 시스템의 완성도는 알고리즘과 더불어 학습용 데이터의 질에 달려있다.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면 알고리즘의 특성 상 문제는 증폭이 된다. 사회적 소수자가 배제된 데이터는 이들에게 정보 환경에서 차별로 귀착됨은 이미 살핀 바 있다.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데이터 셋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차별적인 결과를 드러낸 NLP 시스템의 데이터 셋 구성을 새롭게 편집하고 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편향성을 제거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안은 데이터 셋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배제에서

14)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NLP 시스템에서 단어 임베딩의 광범위한 활용을 들 수 있다. 단어 임베딩은 데이터에 나타나는 단어에 대응하는 밀집된 실수 벡터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 컴퓨터상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단어에 의미적 속성을 부여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NLP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인하는 인구통계학적 편향의 해결 방안은 과대표성을 드러내는 집단을 학습 데이터로부터 비중을 줄이거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다. 최근에 제시된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은 현재의 인구 구성비를 학습데이터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Mohammady and Culotta 2014). 모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완화시키는 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전형성을 드러내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앞서 제시한 ‘남성’과 ‘의사’의 연결고리를 삭제함으로써 편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IV. 음성 데이터 구축 디자인과 윤리적 고려

1. 학술 목적의 음성 데이터 디자인의 특성

우리는 II장에서 실험실 수준의 NLP 연구와 NLP 연구가 실험실을 벗어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음성 데이터에 대한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는 실험실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 주를 이루다가 음성 합성이나 AI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 시스템 등이 상용화되면서 관련 기술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서상규·김형정(2005)에 따르면, 음성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순수 연구 목적이거나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구축한 음성 데이터가 있다. 언어학적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음성 데이터는 전사 작업 이후에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의 언어학적 주석 작업을 거쳐서 활용된다. 다음으로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이나 음성 합성(speech synthesis)과 같은 NLP 연구 목적으로 구축한 음성 데이터가 있다. 이들 데이터는 음성 파일에 대한 분절(segmentation)과 라벨링(labelling) 작업을 거쳐 실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NLP 연구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에 대한 디자인은 공개되거나 기존 연구에서 정리된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언어학적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한 음성 데이터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성 데이터는 음

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층위의 전사 및 언어학적 주석이 부여된 음성 코퍼스이다(신지영 외 2015). 이 가운데에 자유 발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살펴보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유로운 대화 발화를 수집한 것으로서, 연령에 따라 성인(20-30대)과 청소년(중2, 고2), 초등학생(초등학교 1 3 6학년), 아동(3~8세) DB로 구성되었다.

〈표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센터 자유발화 DB 구성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화자의 수	53명	54명	39명	57명
어절 수	61,334	65,825	119,546	174,409
분량	25시간	9시간	13시간	19시간

신지영 외(2015)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음운 전사와 운율 라벨링이 되어 있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으나 지역적으로는 서울 방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성인의 경우 20-30대 화자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에 맞추어 구축한 음성 데이터는 규모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며 외부에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개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차원에서 구축한 음성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음성 데이터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국어 구어 전사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이다¹⁵⁾. 아래의 〈표 2〉에서는 세종 구어 말뭉치의 장르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의정(2018)에서 지적한 바처럼, 세종 구어 말뭉치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데이터의 분포 조사 없이 입수

15) 세종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한국의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크게 문어, 구어, 병렬, 역사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에 구어 말뭉치에 해당한다. 이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와 형태소 분석 말뭉치로 나뉘는데, 배포판을 기준으로 원시 말뭉치는 약 100만 어절, 형태소 분석 말뭉치 역시 약 100만 어절이다. 원래 10년간 구축한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의 경우 420만 어절의 규모이지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에 100만 어절만 배포되었다.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표 2〉 세종 구어말뭉치의 장르 구성(안의정, 2018)

상호작용성	공공성	텍스트 유형
독백(24.44%)	공적(18.66%)	강연, 강연(라디오), 강의, 강의(TV), 개회사/폐회사, 발표, 설교, 주례사, 설교(라디오), 행사발화
	사적(5.77%)	경험담 이야기하기, 동화 들려주기, 영화줄거리 이야기하기
대화(75.56%)	공적(46.09%)	구매대화, 뉴스(TV), 방송대화(라디오), 방송대화(TV), 상담, 상담(라디오), 수업대화(대학), 인터뷰, 인터뷰(TV), 주제대화, 진료대화, 토론, 토론(TV), 토론식강의, 토의, 참여식강의, 회의
	사적(29.47%)	일상대화, 전화대화, 주제대화

안의정(2018)에서는 이 말뭉치의 장르적 구성에서 일상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대화의 비중은 75% 가량을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에 일상 대화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의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일상대화 데이터를 요구하는 IT 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프로젝트를 주도한 기관이 주로 대학이었기 때문에 강의나 강연, 수업과 발표, 회의 등의 대학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데이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역시 큰 한계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역과 분포를 고려한 음성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계획이 국가에서 주도한 대규모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자의 연령과 성별의 분포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처럼 전체 발화자 가운데에 20대의 발화자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연령 미상으로 분류되는 발화자의 비율이 52%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음성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화자의 구성에 대한 고려와 정보 수집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언제나

정보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별 분포의 불균형 역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표 3〉 1998-2005년 세종 구어말뭉치 성별 및 연령별 분포(서상규, 2006)

1998년 -2005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나이 미상	성별 합계	성별 구축 비율 (%)
남성	99	686	223	294	259	172	2,601	43,374	63.94%
여성	154	852	263	52	59	18	831	2,229	32.89%
성별 미상	0	0	0	0	0	0	215	215	3.17%
연령별 합계	253	1,583	486	346	318	190	3,647	6,778	100%
연령별 구축비율	3.73%	22.69%	7.17%	5.10%	4.69%	2.80%	53.81%	100%	

지금까지 살펴본 학술적 음성 데이터는 앞서서 논의한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에 인구통계학적 편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20대와 30대에 데이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동과 노년층에 대해서는 배제의 위험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대표성이 결여된 데이터의 구성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자동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삼성에 다니는 30 대 남성 회사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시스템이 70 대의 은퇴한 여성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작동이 어려우리라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현실세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II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음성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영향력이 실험실 내에 국한되었을 때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학문적 관심 아래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2. 한국어 방언 인공지능 데이터의 성격과 윤리적 함의

2.1. 한국어 방언 인공지능 데이터

2020년 9월에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 아래에 진행된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¹⁶⁾. 인공지능 시스템이 방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의식 아래에 방언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5개 권역(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의 일상대화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고 해당 텍스트를 방언 음성과 비교, 합성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로 구축된 방언 데이터는 음성 발화, 음성 인식, NLU¹⁷⁾, NLG¹⁸⁾를 포함한 NLP 전 분야와 온라인 심리상담, 상담 챗봇, 스마트 스피커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제품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규모의 방언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한국어 음성 데이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음성 데이터가 다양한 대화 도메인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지만 그 구성이 표준어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이다¹⁹⁾. 한국어 방언을 다섯 개의 권역(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으로 나누고 10,000명 이상의 화자가 총 15,000 시간의 음성 데이

16) 이 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관 기관인 ㈜솔트룩스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사업제안서의 작성 과정에는 필자를 포함한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참여하였다.

17)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약자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언어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18)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의 약자로 기계가 자연언어를 생성해 내는 과정을 가리킨다.

19) 신지영 외(2015)에서 보고한 ‘한국인 표준 음성 DB’는 상대적으로 대규모(3천명 목표)의 인원을 전국 단위에서 수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 다만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와 문장이나 문단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음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특성이 뚜렷이 반영된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

터 셋을 생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특정주제(10개 내외) 및 분야로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 자료를 전사 단위로 편집하고 개인 정보 및 불필요한 내용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녹음자료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를 체결하여 향후 자료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자의 연령별 분류는 총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1그룹은 10대와 20대로 구성을 하고 2그룹은 30대, 3그룹은 40대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0-9세²⁰⁾나 70세 이상은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포함될 경우에 3그룹에 포함시켰다. 화자의 지역과 연령의 분포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4〉 화자의 지역과 연령 분포

지역	1그룹		2그룹	3그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강원도	800		800	400			2,000
경상도	800		800	400			2,000
전라도	800		800	400			2,000
제주도	800		800	400			2,000
충청도	800		800	400			2,000
합계	4,000		4,000	2,000			10,000

2.2.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의 윤리적 함의

앞서 II장에서, 정보의 자원(Resource), 생산(Product), 대상(Target)과 윤리적 주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Floridi(2006)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가 보여주는 윤리적 함의에 대해 RPT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 물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음성 데이터를 제외시킨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재권·이경미(2011)에서는 유아의 음성으로 훈련시킨 음성인식기의 성능이 유아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에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는 ‘자원으로서의 정보 차원(R)’에서 정보의 취득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자에게 녹음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녹음된 음성 자료 및 저작권 이용 허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발화 참여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사 단계에서 비식별화 과정을 거쳤다. 국가 주도의 데이터 수집 사업이니만큼 과거 학술적 목적의 데이터들이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개가 불가능했던 사정은 확연히 개선이 되리라 기대한다. 실제로 향후에 개발되는 데이터와 저작 도구 등을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주도 아래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발화 참여자들에게 비교적 공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일은 이익을 중시하는 사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기에 가능하다. 이 사업 역시 ‘MTurk’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소싱 시스템을 활용하나, 국가사업의 특성상 발화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착취의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는 ‘환경으로서 정보 차원(T)’에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윈터라이트 랩(Winterlight Labs)의 예를 다시 떠올려 보기 바란다. 에어컨의 인공지능이 방언을 인식하지 못하면 리모컨을 사용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렵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가능성은 이미 성큼 다가온 암울한 미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이터 셋의 다양화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에 도외시되던 지역 방언의 자유대화를 방대한 규모로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데이터를 다양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음성 데이터가 주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는 특히 노년층이 데이터 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V. 결론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인 AI 기술 확장을 위한 단기간 내 대량의 AI 학습데이터는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어 대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셋의 대부분은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NLP 시스템에서 다양한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 구축하는 음성 데이터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에서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유발화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지역별 연령별 화자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배제에 기인한 편향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참고문헌

- 서상규·김형정. 2005. “구어 말뭉치 설계의 몇 가지 조건.” 『언어사실과 관점』 16호: 5-29.
- 신지영·장혜진·강연민·김경화. 2015. “한국인 표준 음성 DB 구축.”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7권 1호: 139-150.
- 안의정. 2018. “구어 전사 말뭉치 구축에 관한 현황과 쟁점.” 『언어와 문화』 제14권 3호: 81-101.
- 유재권·이경미. 2011. “한국어에서의 성인과 유아의 음성 인식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5호: 138-147.
- Ali, S., K. Siddiqui, N. Safdar, N. Juluru, W. Kim, and E. Siegel. 2007. “Affect of gender on speech recognition accuracy.”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188.
- Ardehaly, M., A. Culotta. 2014. “Using County Demographics to Infer Attributes of Twitter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Workshop on Social Dynamics and Personal Attributes in Social Media*,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7-16.
- Armstrong, H. 2015. “Machines that learn in the wild: Machine learning capabiliti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Technical report. Nesta, London, England.
- Balagopalan, A., B. Eyre, F. Rudzicz, and J. Novikova. 2020. “To BERT or not to BERT: comparing speech and language-based approaches for Alzheimer's disease det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speech* in Shanghai, 2167-2171.
- Fort, Karen, K. Gilles Adda, and Cohen Bretonnel. 2011. “Amazon Mechanical Turk: Gold Mine or Coal Mine?” *Computational Linguistics* 37(2): 413-420.

- Floridi, L. 2006. "Information Ethics: Its Nature and Scope." in *Moral Philosophy and Information Technology*, edited by Jeroen van den Hoven and John Weckert, 40-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ridi, L. 2013.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B. and H. Nissenbaum. 1996. "Bias in computer systems."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Systems* 14(3): 330-347.
- Gina, P. 2016. "Talking to Bots: Symbiotic Agency and the Case of Ta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4915-493.
- Goldwater, S., D. Jurafsky, and CD. Manning. 2010. "Which words are hard to recognize? prosodic, lexical, and disfluency factors that increase speech recognition error rates." *Speech Communication* 52(3): 181-200.
- Hovy, D. and SL. Spruit. 2016. "The social impact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aper presented at *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 591-598.
- Koenig, M.E.D., B. J. Kostrewski, and C. Oppenheim. 1981. "Ethics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 45-47.
- Leidner, JL., and V. Plachouras, 2017. "Ethical by design: Ethics best practices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aper presented at *ACL Workshop on Ethic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Valencia, Spain, 30-40.
- Metcalf, J., Emily F. Keller, and Danah Boyd. 2021. "Perspectives on Big Data, Ethics, and Society." *Council for Big Data, Ethics, and Society*.

- Metcalf, J., and K. Crawford. 2016. "Where are Human Subjects in Big Data Research? The Emerging Ethics Divide." *Big Data & Society* 3
- Tatman, R. 2017. "Gender and dialect bias in YouTube's automatic ca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ACL Workshop on Ethic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53-59.
- Thieltges, A., F. Schmidt, and S. Hegelich. 2016. "The devils triangle: Ethical considerations on developing bot detection methods." *Reports of the AAAI 2016 Spring Symposium Series*, 253-257.

Ethical Problems and Solution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llection of Dialect Data as a Starting Point for Overcoming Age and Regional Biases

Jinung Kim*

ABSTRACT

In the age of AI, ethics is the most popular field. Why is science originating from the Greek era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in the era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ase where the service was interrupted due to the racist speech and behavior learned by AI chatbot Tay while talking with users, or the psychopathic tendency revealed by Norman, a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by the MIT research team. These are examples that show the importance of ethical consid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AI. So why does AI cause ethical problems? This is because AI learns based on biased data. The deficiencies of AI begin from the bias of data including gender, race, and region.

The Korean dialect AI data construction project is a state-led data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voice data built in this project is very valuable in that it collects free speech, which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bsolute amount of the existing voice data is insufficient, and it is col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peakers by age by region. It offer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bias caused by exclusions in the data.

Keywords : Dialect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thics, Bias, Exclusion

투고일: 2021.02.14. 심사일: 2021.02.26. 게재확정일: 2021.03.09.

*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3.6.1.93>

【연구논문】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임상욱*·전지혜**

논문요약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출현율이 높지만, 고용을 비롯한 사회참여는 활발하지 못하다. 그 원인으로 는 중증과 중복장애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은 특성과 일반고용에서의 뇌병변장애인 적합직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립생활 운동의 확산과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다소 늘어난 측면도 있으나, 그들의 역할과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병변장애인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에서의 역할, 근무환경, 근로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향후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0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 종사 경험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9명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은 취업전후로 구분되었는데, 중분류는 6개, 소분류 범주는 13개로 나타났다. 취업 전에는 ‘차별경험’, ‘복지분야 취업기회경험’으로, 취업 후에는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 ‘근로환경과 직무에 대한 적응’, ‘자립경험’, ‘고용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체계화와 특성화, 이들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배치, 장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부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뇌병변장애인, 근로경험, 사회복지 종사경험, 장애인 고용정책

※ 본 논문은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은 253,493명으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1,267,174명), 청각장애(271,843명), 시각장애(252,794명)에 이어 많은 장애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출현율은 0.52%로 지체장애(2.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의 고용률은 12%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유형인 정신장애(11.6%)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고용률이 높은 안면장애(59%)와 비교했을 때 5배, 지체장애(44.3%)와는 3.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원인은 타 장애유형보다 높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과 중복장애의 비중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중증의 비율이 68%로 전체 장애 평균 32.8%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 출현율은 0.61%로 지체장애 2.61%와 청각장애 0.64% 다음으로 높다(김성희 외 2017).

이 같은 현실에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있어 뇌성마비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뇌병변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고용도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같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그동안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확대와 고용 증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인턴제의 뇌병변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3%지만 서울시의 경우 25%인 것으로 나타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일반사업체보다는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용의 기회와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의 고용과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는 일반사업체보다 사회복지 분야가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병화 외(2015)는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무 중 자립생활센터 운영, 동료상담가 등 직종을 제안하였으며, 이달엽(2016)은 뇌병변장애인의 직업 현황과 관련하여, 장애인 관련기관 4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사업체 2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6%, 기타 6.3%인 것으로 나와 어느 분야보다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김재익(2018)도 뇌성마비근로자들은 일반회사에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단체이자 복지 제공처로서 뇌성마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근로 경험에 관련된 질적연구나 별도의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애인 고용이 신장되어 왔음에도, 중증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은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직무역량도 과거에 비해 신장되고 있기에 향후 뇌병변장애인 관련 고용정책은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로서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적응과정은 어떠한지, 근로환경이나 지원정책은 어떻게 근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도 살펴보고,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사회복지 분야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관련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뇌병변장애의 개념과 특성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그 특성상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동반한다(김현승·민혜영 2019).

뇌병변장애는 1962년 「공무원연금」에서 반신불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국내 최초로 포함되었고, 1982년 「장애인복지법」의 근간이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뇌병변장애가 포함되었으나, 지체부자유자의 하위 항목으로 규정되었다(김현승·고은 2018).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체부자유자가 지체장애인으로 변경되어 지체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정부가 장애범주의 선진화를 위해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정부가 장애유형의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로부터 분리되어 별도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유형으로 추가되었다³⁾.

뇌병변장애의 세부장애 유형은 발생원인 및 시기, 병태 양상, 장애경험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박희찬 외 2015),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그 외의 모야모야병과 같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뇌성마비는 대부분 선천적 원인 혹은 생후 2년 이내에 발생하여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발달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은 후천적 장애로 대부분은 성인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생애주기 측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김현승 외 2018).

3) 199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정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결함의 5종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동 법이 개정되면서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를 추가하여 총 10종의 법정 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함. 이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년~2007년)」(관계부처 합동, 2003)에 따라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현 뇌전증장애), 총 5가지 종류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며 범주가 이차적으로 확대됨.

따라서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뇌성마비 장애인을 중심으로 특히 직업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의 경우에는 성인기 이후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뇌병변장애이기 때문에 생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뇌성마비 장애와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뇌졸중은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경험과는 더욱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으로서는 가장 취업과 근로경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에 본 연구는 초점을 두었다.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장애인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성인기에 접어드는 뇌병변장애인은 취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애유형이라는 조사결과(보건사회연구원 2018)에 따라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과 근로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2. 뇌병변장애인 근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뇌병변장애인의 고용, 취업, 근로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전후이다. 2000년 이전에는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관련 연구도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기에 뇌병변장애가 일부 참여하는 것이어서 뇌병변장애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00년 이후 뇌병변장애가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주제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뇌병변장애인의 낮은 고용 현황을 장애특성에 기인한다고 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성규(2009)의 연구에서 뇌병변장애인은 경직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서 비장애인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신체적인 작업에서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업무가 가중되는 환경에서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에 고용 및 고용 유지가 가장 어려운 장애인으로 다루어졌다. 김재익(2018)의 연구에서도 뇌성마비 장애는 뇌의 신체근육조절 기능의 결핍에 따른 증상이기 때문에 손으로 밀기, 압박하기 등 근력이 약하고, 힘의 조절, 근육운동의 협응작용, 구부리기, 올라가기, 서있기, 이동, 글씨쓰기, 옷 입기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동작관리에 애로점이 많은 편이고,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시지각 운동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즉, 장애 특성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인이 일반 고용 환경에서는 맞는 직무를 찾기 어려우며,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요인은 장애 특성 외에도 뇌병변장애인의 심리적 특성도 원인으로 연구되었다. 김재익(2001)은 뇌성마비장애인은 유년기 이전에 장애를 판정받은 관계로 심리·사회적 갈등이 심한 장애 부류에 속하며 개인에 따라 장애특성이 달라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도 너무나 다른 문제와 고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뇌성마비장애인은 자아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평가절하된 사회적 영향에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김재익 2001; 임종호 2006),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대하여 심한 열등감과 비장애인 및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수월하지 못하고 심리적 긴장감이 대단히 높다(김재익, 2018). 뇌성마비장애인이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가족 내에서는 고립감을 느끼고 또래집단에서는 심리적으로 거부되는 등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좌절감 및 무력감을 느낀 것이 성인기의 사회생활 및 직장 내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는 사회생활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비독립성, 자기중심성, 책임성 결여와 같은 문제적 특성으로 나타난다(김재익 2001; 임종호 2006;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4). 뇌병변장애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낮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에는 뇌병변장애인 개인의 장애특성이나 심리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고용환경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도 일부 있었다. 임종호(2006)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 연구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고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또한 손용근(2008)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관점은 일자리를 개발, 육성과 장애유형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성규(2009)는 고용된 뇌병변장애인의 조직몰입을 위하여 직무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적지원의 효과성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도화 검토, 채용검토, 전달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 대중교통수단 및 이동에 관련된 편의시설의 설치 강화

제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권미정 2005). 문정란(2008)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견지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득확보와 관련하여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달엽(2012)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1995년 시작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을 통해 고등교육 참여의 기회를 늘렸지만, 이에 맞는 환경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차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열악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교육 수준과 비교하면 소득이 현저히 낮은 직업을 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과 장애특성에 맞는 직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박주영(2019)도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비교 연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환경변화, 직무개발과 같은 취업자를 늘리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개인특성과 정책적 환경특성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이 어떻게 사회에 진입하며, 근로를 하고 있는지, 근로가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연구한 논문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경험을 면밀하게 살피고, 더 나은 고용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사회복지분야 장애인의 근로 대한 선행연구 고찰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다른 분야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장애인은 취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은 사회복지의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혜

자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연구도 비장애인 종사자의 근로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이후에야 자립생활센터 확산과 함께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 등에 취업하면서 일부 관련 연구가 수행된 수준이다.

이경준, 양희택(2009)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직무환경과 직무관련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있어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내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연장이나 직무환경 개선보다는 장애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급여 보장에 대한 고려와 근무 기회의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개인별 능력을 직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었다. 결론으로는 첫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지적인 제도적용, 둘째, 사회서비스의 확대, 셋째,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지혜(2011)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로서 어떤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연구결과 장애인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이나 근로지원부족 등 직무환경에 불만과 지역기관들의 비협조, 지역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답답함과 동시에 실적 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은 점차 센터 내에서 밀려나는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결론으로는 자립생활센터만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복지관과의 역할분담, 장애인 고용규정의 상향조정, 근로지원제도의 현실화, 근로시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권의 탄력적 유지, 장애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이들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상자로만 접근하던 중증장애인을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한 몇 안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그 대상자가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로 한정되었다는 것과 여러 장애유형을 포괄하여 특정 장애유형의 특성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전반에 걸쳐 종사한 경험을 듣고 뇌병변장애 특성을 위한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복지분야 근로 경험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는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적 조건에 대한 가공이나 통제를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례가 경험한 현상의 중요한 의미와 속성을 밝혀내며, 또한 현상과 과정을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맥락 속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Yin 2009; 이용우 외 2018).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10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가 의미하는 근무경험은 단편적인 참여를 넘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된 과정과 조직에서 경험, 여러 역할에 따른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를 알아내기 위해선 10년 이상의 경력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 사례에 관한 것으로 어느 특정 기관의 경험이 아닌 두 곳 이상의 경험을 통해 기관 형태에 따른 조직환경과 직무를 비교하고 조직원들 간의 관계와 장애이해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역할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역할 등 종사자로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진솔한 사례를 듣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장애인 단체와 자립생활센터에 의뢰하여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으며, 참여 희망자는 연구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받은 뒤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

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으로 근무경력은 10년에서 20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근로 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8명, 여자 1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 1명, 40대 7명, 50대 1명으로, 장애 정도로는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익명성과 해당 사회복지 기관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과 단체명은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참여 자	소속 사회복지 기관 유형	방식	성별	장애 정도	연령	근무 경력
A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장애인단체	대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B	B, C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면	남자	중증	40 대	15년 이상
C	B장애인단체, D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장애인복지관	비대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D	A장애인보호작업장, C장애인단체	대면	남자	중증	50 대	20년 이상
E	D장애인단체, E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면	남자	중증	30 대	10년 이상
F	F장애인자립생활센터, E장애인단체	대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G	G장애인자립생활센터, H장애인단체	서면	남자	중증	40 대	15년 이상
H	H, I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대면	여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I	J장애인자립생활센터, F장애인단체	서면	남자	중증	40 대	10년 이상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개별심층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방식은 대면 인터뷰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관계로 5명만 대면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중 3명은 1:1로 2명은 참가자 사정상 동시에 진행하였고, 4명은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뇌병변장애 특성상 언어장애가 심한 참가자 2명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면 답변을 병행해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한 명당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필요한 질문과 응답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 인터뷰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하나 질문을 하고 참여자가 답변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연구자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로서 참가자와 라포를 형성하는데 수월한 점이 있었으며,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들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진행 할 수 있었다. 배경에 관한 질문 등 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은 당사자가 불편한 경우 일부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편하다면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참여자 질의서》

- 지금까지 본인이 근로자로서 경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분야 선택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직무 배경에 있어서 본인의 장애가 고려되었습니까?

- 직무를 수행하는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직원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으로서 장점은 무엇입니까?
- 직무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 퇴사 혹은 이직을 했거나 고려 중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4.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주제 개념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국내 학술지 연구물들을 참고하였다. 인터뷰 기록의 목적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기간에 연구자로는 지정된 컴퓨터 이외에서 열람하지 않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와 기관실명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기관명 대신 영문 알파벳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take(1995)가 질적 사례연구 분석방법으로 소개한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Categorical Aggregation or Direct interpretation)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범주 합산과 직접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하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방식이며, 이와 함께 지속적 비교방법의 기본적인 전략은 개념구축을 지향하는 모든 질적 연구방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유영준 2009; 허미화 역 1997). 자료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는 심층면접의 녹취록에 대한 개방코딩(open-coding)과 의미단위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심적인 범주들을 찾았으며, 새로운 범주들은 기존의 범주들과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인터뷰 완료 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고 사례 내 분석 (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출 단위 분석을 통해 사례 내 분석은 개별 사례에서 뇌병변장애인들이 취업 과정에 겪은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고 사례 간 분석에서 개별 사례들 간의 공통점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근로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사례 내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분야 근로 과정, 경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취업 과정으로는 일자리사업의 참여가 계기로 작용하였고,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와 조직환경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근로 경험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1) 참여자A

40대 중반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로 들어온 계기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로 파견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이직하였으며, 중간관리자를 거쳐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까지 경험하였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그 장애인특성에 맞는 직무를 배정해주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얘기했다.

2) 참여자B

40대 초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만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취업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취업프로그

램에 참여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취업까지 연결되지 않는 못한 경향이 있다. 전혀 다른 환경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경험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근로동기는 조직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애특성이 반영된 근무환경과 조직원의 이해에 따라 장애인의 근로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3) 참여자C

연구참여자 중 장애인복지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유일한 장애인으로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직무와 조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뇌병변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참여자D

참여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50대 중반으로 20년 이상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기 이전인 시기부터 근무를 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참여를 통해 인식개선에 대한 중요성 등을 얘기 해주었다.

5) 참여자E

참여자 중 가장 젊은 30대 후반의 참여자로 10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참여자와는 다르게 학창시절부터 사회복지분야로 진로를 선택하여 나이에 비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자립생활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우선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6) 참여자F

4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한쪽이 마비된 편마비뇌병변장애인이다. 취업을 위해 장애인 전문직업학교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뇌병변장애라는 이유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취업으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 중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장애가 덜 심한 참여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를 통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에게 미안함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7) 참여자G

4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험이 있으며 참여자 중 가장 언어장애가 심한 관계로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에 장애특성으로 인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맡은 업무는 문서작성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직무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장 힘들어했던 업무는 대외 활동과 같은 것들이었다.

8) 참여자H

유일한 여성 장애인 참가자로 10년 정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다. 참여자H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불규칙성과 참여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뇌병변장애인 고용이 활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9) 참여자I

4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으로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처음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업을 위해 고용공단에 지원하였으나,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장애인단체에서 중간관리자까지 진급을 하였으나, 진급할수록 늘어나는 업무량과 장애인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직무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근로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간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인력지원체제와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배정,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얘기했다.

2. 사례 간 분석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2>와 같이 2개의 대분류, 6개의 중분류, 13개의 소분류로 나타났다. 분류기준은 취업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 취업의 동기, 조직에서 역할, 직무 수행 어려움, 정책지원 활용 여부, 근로의 의미를 알기 위해 <표2>와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어떤 경로로 사회복지분야로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취업전과 후로 구분하였으며, 취업 전에는 뇌병변 장애인은 취업의 장벽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당사자들 간의 자조모임을 넓혀가거나 장애인 일자리를 접하면서 사회복지분야로의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취업 후에는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근로환경과 직무에 적응하고자 정책자원을 활용하고 개인의 강점을 살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었다.

<표 2> 분석결과 범주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취업전	차별을 경험함	취업의 장벽을 느낌
		고용훈련분야에서도 차별을 받음
	복지분야 취업기회가 생김	동호회모임 등 자조집단의 활성화 됨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의 기회가 생김

취업후	개인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	언어 특성으로 인한 조직내 부조화를 경험함
		조직과 나 사이의 업무 속도에 격차가 발생함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조직의 이해가 부족함
	직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함	인적지원 정책활용을 통해 직무를 수행함
		장애특성을 살린 직무가 주어짐
	자립을 경험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이 생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험함
	뇌병변장애인 고용정책변화를 요구함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개발이 필요함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용안정 정책을 요구함		

1) 취업 전

(1) 차별을 경험함

① 취업의 장벽을 느낌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생활은 출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였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졸업 후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거나 교육과정에서부터 뇌병변장애는 차별을 받아 왔다. 대학에 진학한 6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곤 이들의 대학교 전공은 행정학, 경영학, 영문학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해당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을 사회복지로 선택한 참가자도 본인의 의사 보다는 주위에 권유로 선택한 것이었다.

참가자 E

제가 장애인이어서 사회복지로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추천해주셨습니

다. 원래는 전자기술하고 컴퓨터로 가려 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신체 검사 같은 것을 해서 떨어져서 인문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사회복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복지관하고 자립생활센터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② 고용훈련 분야에서도 차별을 받음

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 참가자들도 전공을 살려 취업한 경우는 없었다.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직업훈련의 과정을 마쳤더라도 취업 과정에서는 차별을 받았으며, 전공을 선택하는 데도 뇌병변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이 같은 차별과 취업의 높은 벽은 장애인 전문 고용지원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고용지원도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은 어려웠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취업 연계프로그램도 이들은 차별을 경험하였다.

참가자 B

직업훈련으로 웹디자인을 배웠는데 컴퓨터로 하는 건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어려워했고 배웠지만, 컴퓨터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건 반복훈련이 돼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정을 마쳤습니다. A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훈련연계사업으로 한 겁니다. 거기도 차별이 있었어요. 경증장애인들은 취업이 잘 되었는데 저 같은 뇌성마비와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취업하기 어려웠습니다.

참가자 I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나 한 번도 소개받은 적은 없습니다.

(2) 복지분야 취업기회가 생김

① 동호회모임 등 자조집단이 활성화됨

참가자 중에는 사회에서 받아 온 차별과 경험이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차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동호회 같은 모임이 발전하고 확장하여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가자B

자립생활센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는 검색을 해서 장애인 청년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조모임을 시작해서 청년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청년학교에 다니게 되고 정식취업을 해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참가자G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오다가 대학 시절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되어, 당사자 운동인 장애인 운동으로 삼게 되었고, 정치에도 관심을 두게 되어 정당의 당직자도 하게 됨. 장애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장애 때문에 가지게 된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②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짐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이 사회복지분야로 취업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그 당시 확산하고 있었던 자립생활센터와 연결되어 정식 직원이 되거나 장애인단체에 취업하게 되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고용 분야의 창출과 더불어 무언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기회가 없었던 장애인들은 그 기회를 살려 취업까지 성공한 좋은 사례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A

사회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만들어주고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근무를 해야 했는데 저는 주민센터에 신청했고 그쪽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고 전 회사에서 계약이 끝나고 자립생활센터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여서 사회복지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I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알게 돼서 자조모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시작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참여하면서 자립생활센터 업무를 조금씩 맡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여 10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2) 취업 후

(1) 개인과 조직특성의 부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

① 언어 특성으로 인한 조직 내 부조화를 경험함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뇌병변장애 특성 중 하나인 언어장애가 조직생활과 직무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고, 언어장애가 심한 참가자들은 본인의 언어장애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며, 직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언어장애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부담스러워 했으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만나고

접촉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의 형태 즉 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조직구성원에 따른 조직의 분위기가 이들이 종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직원 중에 장애인이 많거나 장애 감수성이 높은 관리자 혹은 대표자가 있는 조직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이 쉽게 적응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직원이 모두 비장애인이거나 관리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직무 수행과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참가자 A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습니니다. 언어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힘든 점이 스트레스여서 회사를 오래 못 다닌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잘못 들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니다.

참가자C

힘들었던 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대인관계가 좋다고 해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의시간에서 말을 할 때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회의시간에 제 주장을 제때 못했고 제 말을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참가자G

아무래도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익숙한 사람들과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참가자E

언어장애 때문에 아무래도 항의 같은 거 잘 못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하고는 트러블

이 없는데 관리자가 문제였죠. 단체장이나 회장 같은 단체장이 힘들었어요.

② 조직과 나 사이의 업무 속도의 격차가 발생함

참여자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직무를 해야 하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뇌병변장애인 특성을 이해해주지 않는 조직문화라 할 수 있다. 참가자 중에는 처음 취업했을 때에는 본인 장애의 특성에 맞는 업무와 업무량을 조절해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힘들어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량보다 2배, 3배 이상의 업무를 해야 하는 예도 있었으며,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본인이 대신 업무를 해야 하는 예도 있었다.

참가자 A

업무량이 제가 가진 장애 때문에 속도를 낮춰야 했는데 속도를 내지 못해 제 성격에 지쳐서 그러다 보니 많이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서류작업인데 예를 들어 서류의 양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10장인데 센터에서 원하는 건 70장을 원했습니다.

참가자 F

저 같은 경우는 전직 장애 간사로 일했어요. 전에 일하는 데가 II센터였는데 국장은 육아휴직으로 팀장 일을 이어받아서 팀장은 중간관리자 역할보다 간사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것 없이 물 흐르듯이 일했는데 글썅요.

③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조직의 이해가 부족함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뇌병변장애

의 특성인 언어장애로 조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조직생활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참가자F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 장애 공감을 못 해서 그런 걸 장애 감수성이라 말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들은 종종 발생하고 전 직장에 대표님도 뭔가 말을 하면 씹히다 보니까 말 잘하는 전 직장에 대표님도 뭔가 말하다가 말 잘하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면 무시당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 이러니까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른다,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4) 직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함

① 인적지원 정책 활용을 통한 직무를 수행함

장애특성과 조직의 이해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인적지원정책이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지원은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사 같은 인적지원으로 보조기와 같은 물적 지원의 경우 책상과 의자 같은 사무용품 지원이 전부였으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지원인력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70%라고 응답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원분야로는 문서작성, 서류관리, 의사소통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의 경우는 사무보조에서 기본인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인력이 연결되는 때도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조직에서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만을 보조

해야 하는 근로지원인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상황으로 인해 정말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었다.

참가자 A

제가 하는 일이 100이라고 하면 70% 근로지원인이나 활동보조인을 의지했습니다. 나이가 20대인 분들은 더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참가자 B

한 30~40% 정도 그것도 가능하기가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센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전에 활동지원인은 제가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만 파일을 끼워줬고 주말에 나와서 내가 다했는데 지금은 굳이 주말에 하지 않아도 할 만큼 다 해놓고 들어가고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한두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참가자C

한 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업무이니까 했고, 주로 언어 보조, 저를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제가 손이 불편해서 서류 옮기고 정리 하는 그런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가자D

제가 10년간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지원인 혹은 활동지원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인의 장애인 당사자가 도와줄 수가 있고 업무지원도 장애 업무만 보조해줘야 하는데 종종 근로지원인에게 장애인의 업무가 아닌 사업체의 업무를 부탁한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요청을 최고 관리자나 제 상사가 부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절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 업무가 간단하

고 쉬운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지원인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 필요한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관련된 최고 경영자나 직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② 장애특성을 살린 직무가 주어짐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한 후 이들의 직무는 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 보조금 사업 진행과 같은 직무를 했다. 직무 배정의 특징으로는 장애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언어장애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기획, 기사작성,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 같은 직무가 배정되었으며, 대외활동이 가능한 참가자는 연대 활동 같은 대외활동이 주 직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뇌병변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이러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살리고 고용도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 B

제가 근로자로서 경험한 것은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에서 일했고 동료상담과 일지를 쓰는 것을 주로 했었고 지금 있는 센터에서도 권익옹호 전반적으로 서울시(보조금) 사업이라던지 전체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C

제가 글 쓰는 것에 소질 있는 것 같아서 그 뒤에 그러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언어장애가 많으니까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것에 제한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G

장애인단체 실무자로 시작해서 지역복지단체 실무자,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실무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모사업 연구원(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조사), 진보정당 당직자를 거쳤고 사업계획 및 집행, 정책제안, 성명 및 논평작성, 자조모임 조직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5) 자립을 경험함

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이 생김

참여자들에게 사회복지분야의 근로 경험은 단순히 취업 기회제공, 직장체험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취업을 위해 여러 분야에 도전하였으나 늘 좌절되고 차별 받아 온 참여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존재감 느끼고,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참가자 A

제가 근로자로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간관리자와 대표자의 경험을 통해 조직 구성원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②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험함

특히 성인이 되어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취업에 계속된 좌절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물려면 이들의 경험은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참가자 A

그동안 부모님에게 의존해왔던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이나마 제가 급여를 받음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I

대학만 졸업하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면서 공부시켰는데 막상 졸업 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암담했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자라사업을 소개받았고 이게 계기가 되어 단체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뇌병변장애인 고용정책변화에 대한 요구

①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개발이 필요함

뇌병변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뇌병변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특성이 반영된 역할부여, 꾸준한 직무개발과 더불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하나의 사례로 한때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현재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행정서류 중심의 업무가 많아져 중증장애인을 거의 볼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직무가 행정서류 작성이 주를 이루게 되어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결국, 성과와 속도 중심의 사회복지 분야의 수행 평가 방식이 뇌병변장애인의 역할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가자A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한데 속도가 느린 것도 개성으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C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규정이 많고 주요 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주를 이루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없습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업무에 대한 고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할당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는 장애인들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②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용안정 정책을 요구함

뇌병변장애인은 무엇보다 또한 고용안정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10여년 이상 사회생활을 이어온 연구참여자들은 수많은 장애인 고용정책이나 지원사업을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생존한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참가자E

고용이 안정되어야 해요. 제가 보기엔 3가지가 있어야 해요 사람 인식이 아직 장애인들은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막말로 지적장애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한다고 고정관념이 생겨요. 일단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애인에 대해 업무가 장애인 맞춤 업무가 없어요. 그게 빨리 돼야 해요.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돼야 해요 아직 노동부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되어있어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뇌성마비도 근무에 맞는 돈을 못 받고 있으므로 제가 생각한 건 고용도 고용인데 이런 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가자F

일단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어딘가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선뜻 마음을 먹고 못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의 역량

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편의시설의 확보도 100%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의사소통 보조기기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확대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이 취업환경에 노출되길 기다 싶지가 않아요. 20살 무렵에 만났던 친구들이 복지관 같은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의 수준이 차이가 났는데 그때는 괜찮았던 친구인데 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맨 날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등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표현도 못하고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들도 몇몇 봤죠.

참가자H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후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장애인들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정규직이 되면 되는데 이제 1년만 하면 끝나요. 근데 1년 끝나고 장애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거는 진짜 한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수급자 받으면 일 못하는 거고 안 받으면 일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인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V. 결론 및 제언

뇌병변장애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경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도전을 하였으나 결국 좌절되었으며, 그나마 뇌병변장애인이 취업할 방법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가 유일하였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파견되는 형태로서 뇌병변장애인은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로 종사하게 되었다.

뇌병변장애인이 주로 해왔던 직무로는 동료 상담과 권익옹호, 소식지 발간, 보도

자료 및 성명서 작성과 같이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행정서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특히 언어장애가 심할수록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본인의 언어장애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대외활동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특성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조직원들로 인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회복지분야는 분명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역할이 존재하고 필요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상자들과의 소통에 있어 비장애인 종사자보다 장점이 있었고 자신의 장애를 근로에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근로를 통해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제적인 활동으로 가족들에게 당당함을 느끼며 살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도 받고 있었고,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 같은 인력지원이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3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원인력은 문서작성, 서류관리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인은 여전히 조직 내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무역할이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여러 장애유형 중 아직도 사회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하고, 특히 고용관련해서는 더욱 큰 차별을 느끼고 있었으며 10년이 넘게 일하고 있음에도 뇌병변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직무가 부족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을 통한 향후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화와 특성화가 필요하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경로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구직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뇌병변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취업전문업체를 통한 취업은 0%로 나왔다. 이는 여전히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취업이 어려우며, 취업전문기관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에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참가자들이 10년에서 15년 전에 경험했던, 취업의 장벽이 높은 상황과 오늘의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경로의 유일한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의 단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에서도 뇌병변 장애인과 같은 중증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차별화 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중증 뇌병변 장애인 참가는 낮다.

또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일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어려운 현실이다. 2019년 발생한 설요환 동료지원가의 자살사건이 이를 증명하였다. 그는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업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뇌병변장애인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 중심의 양적 성과를 요구하는 현실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는 공공 부분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사업비만 지급하고 그 직무와 역할은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내용과 사업비만 주어지는 형태보다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속도나 성과 요구 및 평가와 관련해서도 중증장애인을 고려한 체계적 직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뇌병변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근로지원인과 같은 인적지원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이성규(2009)는 뇌병변장애인은 근로지원(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때 직업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평균 43.8%의 작업능률로 근로지원을 받을 때의 작업능률과 비교한다면 56.2%의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김재익(2018)도 뇌병변장애인은 근로지원 서비스는 70.8%가 경험하였으며 86.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도 근로지원인과 같은 인적지원을 받는 뇌병변장애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30~7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지원하는 데 있어 보조기기와 같은 물적 지원 보다는 인적지원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의 보조 분야로는 문서작성, 서류관리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 보조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지원을 위해서 그만큼 뇌병변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근로지원인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지원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는 다르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수 시간도 없으며 그 자격기준도 없다. 적어도 근로지원인을 위해서 문서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지원체계에서는 그 기준이 엄격하지 못해 본인이 원하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 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배치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질 높은 근로지원 인력이 배치되면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지원인은 최저시급의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 장애인과 근로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맞추고 직무를 함께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뇌병변장애인은 장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직무 만족이 높았고 성과도 좋았다. 참가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차별화된 이들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그 외 여러 임무를 수행했을

때 피로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 퇴사나 이직의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장애인 복지 및 자립생활 지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자립생활 계획기획, 동료상담, 권익 옹호, 정보전달과 같은 직무는 장애인이 수행하고, 보조금 사업 진행 시 회계, 행정서류의 업무는 되도록 비장애인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뇌병변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만이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국가보조금 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300여 개에 달한다. 이 센터 내에 장애인 근로자 수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점점 비장애인 중심의 조직이 되어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정하고 직무에 대한 구분이 되는 형태로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며, 장애특성이 고려된 직무개발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기관 내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뇌병변장애인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으며, 다른 장애 유형보다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높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데, 소통이 중요한 복지 현장에서 언어장애는 갈등과 소통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장애인의 퇴사나 이직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관련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분야 기관 종사자들부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복지제공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의 종사자들부터 중증장애인을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로 인식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뇌병변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재익(2018)은 뇌성마비인의 의사소통 장애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재활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뇌병변장애인 근로자는 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직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 참가자들은 조직 생활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장애특성에서 오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조직원 중에 혼자만 장애인으로 근무하면서 오는 심리적 위축, 언어장애로 인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조직원 간의 갈등과 오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받는 간접적인 차별,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등은 뇌병변장애인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직업 안정과 근로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중 10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근로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근로경험에 대한 사례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과정과 직무활동을 이해하고, 근로경험의 의미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뇌병변장애인들은 비교적 고학력이고 근로활동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으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결론들을 모든 뇌병변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여성장애인은 1명만 참여해 남녀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그만큼 여성뇌병변장애인의 취업이 더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한 뇌병변장애인들의 근로에 관한 사례를 통해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조직환경, 직무와 역할, 조직원들 간의 관계에 등에 관한 내용을 들여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다양한 조직에 입사하거나 창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준비하며 현재까지 일과 삶에 이어온 중증뇌병변장애인의 근로경험과 욕구를 알아본 자체로서 한계도 있으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미정. 2005.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권 1호: 275-300.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재익. 2001. “뇌성마비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장애 인고용』 가을호: 21-50.
- 김재익. 2011. “뇌성마비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익. 2018. “뇌성마비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재활 복지』 22권 1호: 1229-7577.
- 김종인. 2001. 『중증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현승·고은. 2018.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김현승·민혜영. 2019. 『성인기 뇌병변장애인 이용시설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문정란. 2008. “뇌성마비장애인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 2019. “뇌병변장애인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5호: 542-552.
- 박희찬·박은영·박세영. 2015. 『뇌병변 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및 지원정책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손용근. 2008. “뇌병변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영준. 2009.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실천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0권 4호: 515-540.
- 이경준·양희택. 2009. “자립생활센터 근무 장애인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연구.” 『재활복지』 13권 3호: 19-45.
- 이달엽. 2012. 『뇌병변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서울: 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이달엽. 2016. “뇌병변장애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장애영역별 비교.”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권 1호: 1-27.
- 이병화·정도선·노임대·곽유나. 2015.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배치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이성규·심진예. 2004.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영역에 관한 연구』.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이성규. 2009. “뇌병변장애인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권 3호: 247-288.
- 이용우·양호정·유서구. 2018.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사회복지사의 위험 경험과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권 2호: 97-126.
- 임중호. 2006. “뇌성마비인의 고용 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권: 311-336.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04. 『뇌병변장애인의 직업준비에 관한 연구』.
- 전지혜. 2011. “중증장애인 종사자의 자립생활센터 종사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21권 3호: 27-5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발원. 2018. 『2018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Merriam, S. B. 저·허미화 역. 1997.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Stake, R. E. 저·홍용희 외 역. 1995.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A Study on the Working Experien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 Disorders
-Focusing on persons with cerebral palsy who are
engaged in social welfare-

Sangwook Lim*·Jihye Jeon**

ABSTRACT

Among the 15 types of disabilities prescribed by the Disability Welfare Act, people with brain lesions have the highest incidence after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but are not active in social participation including employment. The reasons for this are the characteristics of having a higher ratio of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an other disability types, and the absence of suitable occupations for brain lesion disorders in general employment. In the 2000s, the spread of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 promotion of job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ed to a slight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but interest in their roles and working environment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working environment, and meaning of work in the organization based on the case of the brain lesion disorder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discusses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employ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brain lesion disorder in the future. I wanted to.

For this study, 9 cases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social welfare were surveyed, and subject word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ork experien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was classified into before and after employment, with 6 in the middle category and 13 in the small category. The results of the middle classification ar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before employment and 'Experienc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welfare field', and after employment, 'Difficulties due to disparity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dapta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 Doctoral Stud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job', 'Experience of independence', It was categorized as a'requirement for change in employment policy'.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e work experien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include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job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training and placement of professional human support for their employment stability and efficient job performance, and work that can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It was discussed the need to assign roles, improve awareness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and prepare a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system.

Keywords : cerebral lesions disabled, work experience, social welfare experienc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